

월간

다 함께

2002년 7월 [14호]



**우리는
북한 난민을 환영한다**

서총련 투표 전술 비판 / 북한 난민 / 박근혜 활용론 비판
유럽은 우경화하는가? / 인도-파키스탄 전쟁 위기는 고비를 넘겼는가?

7월 4일 (목)

2시 ~ 4시

우리는 왜 이주 노동자들을 환영해야 하는가
이란주(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책국장)

4시 30분 ~ 6시 30분

어떻게 해야 여성 해방을 이룰 수 있을까?
정진희(월간 <다함께> 기자)

영화 상영

7월 5일 (금)

2시 ~ 4시

헐리우드와 전쟁
정건(민주노동당 당원)

4시 30분 ~ 6시 30분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
이승용(좋은벗들 평화인권 부장)

7월 6일 (토)

2시 ~ 4시

어떻게 환경을 구할 것인가?
최승국(녹색연합 협동 사무처장)

4시 30분 ~ 6시 30분

6·13 선거와 민주노동당

뒤풀이

- 기간 : 7월 4일(목요일) ~ 7월 6일(토요일)
- 장소 : 경희대 도서관 시청각실
- 주최 : 다함께

2002다함께 여름토론평장

핵무기 월드컵

월드컵 대회가 내뿜는 민족주의 열기가 강렬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필승 코리아”를 외친다. 언론들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승리가 모든 갈등을 없애 준 것처럼 보도한다. 이참에 계급 화해를 못박을 태세다. 그러나 노동자 팀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6월 11일에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들은 노동자 팀들의 파업 경기를 애써 무시했다.

김대중은 개막 연설에서 월드컵이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야심이 드러났다. 월드컵 대회 공동 개최국인 일본의 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는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평화는 전쟁의 막간극이 돼 버렸다. 핵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전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것은 아마도 미쳐 버린 체제의 유언장이 될 것이다.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만이 아니다.

조지 W 부시는 스타 워즈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광란의 계획은 인류를 파멸시킬 핵 전쟁을 부추길 것이다. 영국 · 프랑스 · 중국 · 러시아도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도 중동 전역을 겨냥하고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핵무기는 자본주의의 일부다.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는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경쟁에 기초한 체제의 논리적 귀결이다.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각국의 군사 경쟁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가난과 기아라는. 오늘날 세계적 군비 지출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1분마다 1백만 달러(13억 원)를, 하루에 14억 4천만 달러(1조 8천7백20억 원)를 군비에 지출한다. 미국의 연간 군비 예산은 3천9백60억 달러(514조 8천억 원)다. 반면, 날마다 2만 4천 명이 굶어 죽는다. 또, 매일 8천7백 명의 어린이가 설사와 홍역으로 목숨을 잃는다.

최근에 조지 W 부시는 ‘테러 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독트린 마련을 지시했다.(<뉴욕타임스> 6월 16일치.) 이미 올해 초에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한 선제 핵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선제 공격의 첫 목표물은 이라크다. 부시는 이미 중앙정보국(CIA)에 후세인 전복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상원의원 조지프 바이든은 “비밀 작전이 실패할 경우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개적 군사 행동을 취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의 이라크 전쟁 계획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전 운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6월 20일부터 시작될 스페인 세비아의 유럽연합 정상회담 반대 시위는 반전 ·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진을 다시 한번 보여 줄 것이다. 이미 6월 9일에 세비아에서 20만 명이 거리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은 월드컵 대회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집권당은 지방 선거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참패했다. 민주당은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민주당이 몇 개로 쪼개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집권당의 참패 다른 한편에는 진보 정당들의 눈부신 약진이 두드러진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얻은 표를 합하면 160만 표나 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134만 표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파 정당인 한나라당의 급부상에 맞설 대안으로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올해 대선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5년 전보다 훨씬 전진할 것임을 전망케 한다. 대중의 급진화가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성 정당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런 대안을 건설하는 가장 능동적인 요소가 돼야 한다.

목차

3 편집자 머리말

4 저들의 세상 우리의 세상

특집

10 지방 선거 결과

14 선거 지원 활동 경험

16 [운동안의 논쟁] 서총련 투표 전술 비판

18 한총련을 합법화하라

19 북한 난민의 환영받지 못한 탈출

20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부패는 마찬가지

22 [운동안의 논쟁] 박근혜 활용론 비판

24 이주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26 조희연 교수의 전지윤 구속 항의서

28 전지윤 석방 연대 행동

마르크스주의를 배운다

30 국민적 단결 신화

31 노동자들의 의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32 미국이 국내에서 벌이는 전쟁

34 유럽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36 에이즈, 세계화, 자본주의

38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15주년

40 스티븐 제이 굴드를 기리며

격동의 세계

41 인도-파키스탄 핵전쟁 위기

43 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의 한계

44 반란의 아르헨티나

46 독자 편지

47 서평

*다함께*에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3295-4773 / Fax : 02-968-5907

E-mail : altogether2002@ycoos.co.kr

http://altogether.jinbo.net

독자 편지, 투쟁 소식/보고 등을 보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7월 13일입니다.

E-mail : altogetheredit@ycoos.co.kr

옥탑방도 모르는 서민 후보?

이회창은 1백14평짜리 호화 빌라 파문으로 대중의 분노를 사자 “낮은 곳으로 임하겠다”며 양복을 점퍼로 갈아입었다. 또, 가락시장에서 배추를 나르고 환경미화원과 함께 청소하는 등 서민 시늉하느라 갖은 부산을 다 떨었다. 흙 묻은 오이를 씻지도 않고 그대로 먹으면서까지 ‘귀족’ 인상을 지우려 했다. 서민은 흙 묻은 더러운 오이를 그대로 먹어야 한다는 거만한 귀족 의식을 무심코 드러내며 말이다.

이회창은 “소년 가장을 해 본 적도 있다”고 말하고는 자기는 “서민에 가까울 지언정 귀족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전세금 6억 원, 월세 9백만 원짜리 초호화판 빌라 세 채를 쓰던 자가 귀족이 아니라 서민이라니!

지난 5월 24일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한 기자가 “점퍼 차림으로 서민들을 만나도 이 후보는 서민편이 아니라는 말이 많다”고 지적하자, 이회창은 “국가 지도자는 외양보다는 자신의 철학이 서민편인지가 중요하다.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나누려는 생각이 없으면 ... 서민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이회창은 바로 뒤이은 “옥탑방이라는 말을 아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얼마 동안 이회창이 연출한 ‘서민 행보’가 순전한 사기극임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옥탑방을 모르기는 그 동안 빈곤 출신의 서민임을 자랑해 온 노무현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은 일본의 유명 골프용품 회사 블랙 앤 화이트의 4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는다.

이회창과 노무현이 모르는 옥탑방은

서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회창(위)이 살고 있는 고급 저택(아래)

물탱크 창고를 방으로 꾸민 것을 말한다. 건설교통부 공식 통계에만 서울에 옥탑방이 2만 5천 가구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면 아무나 옥탑방이 좁디좁은 데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시베리아’라는 사실을 안다. 창고를 방으로 개조했으니 방열·방한이 될 턱이 없다. 살기가 그렇게 나쁜 데도 서민들이 옥탑방에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집세가 싸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정당 소속 후보들은 평소에 나몰라라 하다 선거 때나 우리의 환심을 사 표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지, 사는 곳은 어떠한지를 도무지 알지 없다.

이들의 서민 시늉하기는 연기력 없는 배우의 연기마냥 어설프다. 한 마디로 꼴불견이다. 저들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조승희

월드컵 동안에도 계속된 노동자 팀의 파업

김대중 정부는 5월 29일에 8백83개 사업장이 월드컵 노사 평화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방용석은 노사 평화 선언이 “외환 위기 뒤 벌인 금 모으기 운동에 비견할 만하다. 노사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시간에 경찰은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농성하던 발전 노동자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그 전날에는 법원이 보건의료 노조 지도자 14명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마침내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가 열리는 동안 단 하루도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 5월 22일에 시작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투쟁은 김대중 정부의 ‘노사 평화 선언’이

기만일 뿐임을 폭로했다.

5월 22일에 두산중공업·만도기계를 비롯한 금속 노동자 2만여 명이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만도 기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기본급 평균 7만 7천 원 인상 양보를 얻어 냈다. 민주택시연맹 노동자들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월급제 실시 합의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에 맞서 파업했다. 공장 매각을 앞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5일 간 전면 파업을 벌여 기본급 7.5퍼센트 인상, 매각할 때 고용·단협·노조 승계 보장과 단일 호봉제 실시를 약속받았다.

캡스 노동자들은 1999년 노조 설립 뒤 첫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동 본사 앞 인도를 점거한 채 6일 간 파업해 노조 전임자 4명 확보, 유니온샵 도입 등의 양보를 얻어

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가장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 41개 병원 1만 6천여 명이 파업을 벌여 대부분 승리를 거뒀다. 고려대 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족한 인력 충원, 임산부 휴일과 야간 근무 금지, 입원실 TV 시청 무료화, 사학 연금 사용자 부담률 인상 노력을 약속받았다. 작업장 대부분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력하게 만들어 파업 기간 임금 지급 약속을 받아냈다.

6월 11일에는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월드컵 대회가 내뿜는 “국민 화합” 열기 속에서도 단호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사장들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

김태훈

이 팀 선수들은 월드컵 관련 보도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 합성 사진은 국제자유노련이 한국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거나 수배 중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려 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일부 활동가들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

우리 팀은 월드컵에 나갈 수 없었다

The Players

1. DAN Byung-ho
IN PRISON
KCTU
President
2. CHA Bong-cheon
WANTED FOR ARREST
President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3. LEE Ho-dong
WANTED FOR ARREST
KCTU-KPSU
Power workers union
4. KIM Jae-gihl
IN PRISON
FKTU
Railway workers union
5. KIM Il-seup
IN PRISON
KCTU-KMWF
Daewoo Motors
6. KIM Jeong-gohn
IN PRISON
KCTU-KMWF
Daewoo Shipbuilding
7. LEE Kyung-soo
IN PRISON
KCTU
Choongbuk Council Chairperson
8. LEE Seok-haeng
IN PRISON
KCTU-KMWF
Fr. Vice-President
9. HAN Seok-ho
IN PRISON
KCTU-KMWF
Organising Director
10. YOON Min-re
WANTED FOR ARREST
KCTU-KMWF
Signetics
11. IN Young-sook
WANTED FOR ARREST
KCTU-KMWF
Signetics
12. Ra Chang-soo
IN PRISON
FKTU
Railways Workers' Union
13. BYUN Hee-won
IN PRISON
KCTU-KMWF
Kia Motors
14. JEONG Yun-ji
IN PRISON
KCTU-KPSU
Power workers union
15. BANG Hyo-hoon
IN PRISON
KCTU
Choongbuk Council
16. HAN Sang-dae
IN PRISON
KCTU-KPSU
KT contingent workers union

Our team won't be at the World Cup

About 30 people are locked up, and many more wanted for arrest in Korea for trade union activities which are within everyone's basic human rights. They are being treated as criminals because they have tried to form trade unions, have sought to protect workers' rights or have joined peaceful demonstrations.

To join the protest, or to find out more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violent and repressive tactics against those involved in legitimate trade union work, visit the website below:

<http://www.global-unions.org/korea2002>

역시 사회보험노조야!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가 열리는 동안,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서울·부산·수원·춘천 월드컵 경기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도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이미 2년째 임금이 동결돼 있다.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진급 적체에도 불만이 높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직원의 34.2퍼센트인 5천4백46명이 감원됐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5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공단측은 월드컵 대회 개막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에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지 않고 시간



만 끌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월드컵 개막 전야인 5월 30일 상암동 경기장 앞에서 4~5천 명의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모여 공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 대 폴란드 경기가 열린 6월 4일 부산에서도 노동자들은 경기장 입구에 가서 시위를 벌였다. 한 노동자는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하

지만 사회보험노조원으로서 그 곳에 서니, 월드컵이 더는 우리의 축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월드컵을 볼 모로 한 공단측의 야비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싸웠다. 노동자들은 “임금 5퍼센트 인상, 2천 명 순차적 승진, 매년 2백 명 신규 채용”을 약속받았다.

김태훈

세계식량정상회담의 수치

6월 10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식량정상회담이 열렸다. 60개 국 정상, 정치인, 관리 등 수천 명이 모여 진수성찬을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이 추진한 정책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굶주리고 있었다.

유엔은 아프리카 남부에서 약 1천3백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만 명이 이미 사망했고, 또 다른 수만 명도 곧 죽을 것이다. 당장 이들을 구제하려면 식량 4백만 톤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식량은 필요량의 겨우 3퍼센트다.

6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굶주리는 사람 수를 8억 4천만 명에서 4억 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늘날 적어도 8억 1천5백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문제는 식량 생산이 아니라 분배다. 지금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만으로도 전 세계 모든 인구가 하루에 2천7백20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

미국은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보다 40퍼센트나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 그러나 미국인 2천6백만 명이 식량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로마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말만 요란하다. 빈국의 외채 상환을 계속 독촉하고 사태를 더욱 나빠지게 만든 자들도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파탄내는 자유 시장 정책과 “구조 조정”을 고집하고 있다.

외신에서

신용카드 범죄의 진실

최근 언론에서 “카드빚 흥기 고삐가 없다”, “카드빚 때문에 살인·강도·자살”, “범죄로 카드빚 해결” 따위 말로 시작하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자 정부는 5월 23일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IMF 초부터 김대중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확보”라는 말로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겼다. 김대중 정부는 카드 회사가 현금 서비스 영업을 확대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특혜를 주었다. 정부는 1998년에 13.9퍼센트였던 카드 회사의 자금 조달 금리를 2001년에 7.4퍼센트로 낮췄다.

그 동안 신용카드 회사가 순이익을 2조 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보장하는 싼 금리로 돈을 빌려 20퍼센트가 넘는 카드 이자를 사용자들에게 물렸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카드 빚 고통이 늘어날수록 카드 회사는 막대한 폭리를 얻었다.

카드 빚이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는 여론의 추궁에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20퍼센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카드 회사가 수수료를 내리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인하를 단지 권고할 뿐이다.

정부는 신용 불량자가 많은 카드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종합대책’은 카드빚을 질 만한 사람들을 카드 시장에서 추방하고 이들에게 신용카드 회원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이제 카드 회사는 20대 초반이나 인턴 사원, 일용직, 유흥업소 종사자, 아르바이트 사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금 서비스를 많이 받거나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신용 구매를 많이 하는 게 문제인가?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일가족이 자살할 일도 없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김대중 집권 4년 동안 4백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정부도 대량 해고를 낳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았다.

취업해서 갚을 요량으로 신용카드를 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용 불량자가 됐다.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1백10만 명이 신용 불량자가 됐다. 그리고 매월 4만 명씩 늘고 있다. 경제 활동 인구 10분의 1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신용카드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신용불량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사채시장이 뜨거워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사채를 쓰고 있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카드빚을 갚기 위해 ‘신체 포기 각서’를 쓰면서까지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개인의 무절제한 소비 때문이라며 신용카드 빚을 진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다. 고작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개인의 각성과 소비 절제다.

그러나 소비는 이미 ‘절제될’ 대로 절제됐다. 가게지출 가운데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비 등 소비지출보다 세금, 연금, 의료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더 늘었다.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보면 상위 20퍼센트 가구 소득이 하위 20퍼센트 가구 소득의 6.75배다. 부유층이 이용한다는 백화점마다 월 평균 1천만 원 이상 지출하는 고객이 1백 명이 넘는다고 한다.

반면 평균 임금이 1백만 원 이하인 노동자가 7백만 명이 넘고 50만 원 이하인 노동자가 1백만 명을 넘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비 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복지다.

범죄는 불평등·가난·소외에서 비롯한다. 불평등과 가난을 부추기는 정부는 체제의 희생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김덕엽

끝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999년 10월 고엽제 피해자 1만 7천 2백여 명은 미국 고엽제 제조 회사 다우 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3일 패소했다.

판결을 내린 법원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고엽제를 다량 살포한 지역과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한 지역이 중복되지 않는다.

고엽제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거짓이다.

재판부는 미국 국립과학연구소(NAS)가 발표한 ‘고엽제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NAS의 연구 결과는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미국 정부는 NAS에 고엽제 연구를 맡기기 전에 다른 연구 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양심 때문에 연구를 거부했다. NAS는 미국 정부에게서 연구 자금 1억 달러를 받았다.

미국 약품연구소가 2월 말 발표한 보고서도 NAS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지난해 4월에는 “고엽제에 노출된 부모와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엽제 피해자들이 법정에 제출한 <켄킨스 보고서>가 미국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의뢰해 작성됐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켄킨스 보고서>는 국제화학노조에서 일한 케이트 켄킨스 박사가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와 베트남

전 참전 군인들의 피해 원인을 밝히려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상당수 미국 공식 연구소 자료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켄킨스 보고서>는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의 끔찍한 피해 사례를 다뤘다. 1953년 독일 루트비그사첸 군기지 노동자들이 2·4·5-T(고엽제를 이루는 화학 물질 중 하나) 폭발로 다이옥신에 노출됐다. 이 사고로 사망한 2백47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신체 부위의 암 발생률이 평균치를 넘었다.

이 보고서는 다른 질병 사례도 들어 있다. 그 중 끔찍한 것은 다이옥신이 낳은 정신 질환이다. 1985년 뉴욕 주 보건성의 연구, 1987년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연구, 1988년 매서추세츠 주 공중보건성의 연구는 베트남 참전 재향 군인이 베트남 전에 참가하지 않은 재향 군인이나 재향 군인이 아닌 남자와 비교할 때 자살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보고서는 다이옥신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을 손상해 우울증이 생긴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작전을 벌인 지역에는 고엽제가 살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1993년 국군 의무 사령부 보고서를 보면 청룡부대가 1967년 12월부터 1972년까지 주둔한 호아안

지역에 고엽제 2백91만 갤런이 뿌려졌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등이 작전을 벌이던 베트남 중동부 해안 지역에도 고엽제 3백72만 갤런이 살포됐다. 당시 군인들은 고엽제가 살충제인 줄 알고 몸에 있는 이·벼룩 따위를 없애려고 옷을 벗고 고엽제를 씻기도 했다. 미군이 수송기로 고엽제를 나를 때 한국군은 맨손으로 고엽제를 낚았다. 고엽제를 뿌린 지역에서 열매를 따먹거나 나뭇잎 위에서 잠을 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군 수는 3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피부가 썩거나 암과 각종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모두 미국이 벌인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김대중은 집권 전인 1997년 전우신문사에서 발간한 <<월남전과 고엽제>> 머리말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비해 고엽제 피해자 대책이 미약한 것을 규탄했다. 고엽제 환자와 가족들이 지난 수십 년 간 짊어진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월남전 참전자들을 노점상을 철거하는 용역 강패로 동원할 뿐 실질적인 보상을 조금도 해주지 않고 있다.

한상원

여성 인권 짓밟는 경찰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 항쟁 20주년 기념 연설에서 정부가 “여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다. 경찰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8일에 경찰은 LG건설 직원들이 송추 원각사에서 여승 3명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승의 사지를 잡고 돌무더기에 팽개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승려들이 LG건설이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원각사 입구에 있던 경찰 1백여 명은 폭행을 막기는커녕 다친 승려들을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았다. LG건설 직원들은 다친 승려들을 6시간 동안이나 감금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월 22일에 뇌성마비 1급 중증 장애인 서주연 씨는 경찰에게 맞아 머리가 찢어졌다. 당시 서 씨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장애인 버스 타기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다.

5월 14일에는 합법적으로 개최된 반미 집회에 참가한 수녀들이 경찰에 폭행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녀들을 강제 연행한 뒤 알몸 수색을 시도했다. 2001년 10월 26일 대법원이 “알몸 수색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경찰은 완전히 무시했다.

경찰은 4월 2일에도 평화 시위를 벌이던 한국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뒤 알몸 수색했다. 구로 경찰서는 여성 노동자 7명을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했다. 그 중 한 여성은 생리중이라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경찰의 인권 유린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4월 19일에는 F15기 선정에 항의해 청와대 면담을 기다리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대표를 경찰차로 들이받았다.

경찰의 폭력과 인권 유린이 끊이지 않자 6월 11일 “여성 인권 짓밟는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인권연합, 시그네틱스 노동조합, 여성민우회 등 24개 사회 단체가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대책위원회는 책임자 징계, 여성 인권 침해 방지 장치 마련, 피해 보상과 사후 대책을 요구한다. 대책위원회 간사 단체인 천주교 여성 공동체 신미영

씨는 경찰이 “사람들을 반인도적이고 굴욕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이 여성 인권을 유린한 사례는 단지 최근 몇 달에 국한하지 않는다. 2000년 6월 29일 무장 경찰 3천여 명이 호텔 롯데 파업 농성장을 침탈해 대부분 여성인 농성자들을 폭행한 바 있다. 농성자 중에는 임신부 20여 명도 끼어 있었는데 무자비한 폭행으로 2명이 유산했다.

6월 11일 ‘여성 인권 짓밟는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정부’ 경찰은 여성 인권 유린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경찰도 시민들에게 맞는 시대’라며 [여성 인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희



1백60만 명이 진보적 대안을 갈구하다

김인식

예상대로 이번 선거 투표율은 매우 낮았다. 유권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투표율은 전국 규모 선거 역사상 가장 낮은 48.8퍼센트였다. 선거에 대한 이런 열의 부족은 기성 정당 모두에 대한 환멸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들은 모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한다. 그래서 다수 노동자들은 여당에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한편, 투표율 하락은 기성 정당들의 실체에 대한 대중적 자각이 확산된 결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투표율은 계속 하락해 왔다. 1998년 지방 선거 투표율은 52.7퍼센트였다. 2000년 총선 때 투표율은 57.2퍼센트였다. 따라서 월드컵 대회는 투표 불참을 부추기는 한 부차적 요인은 됐을지언정 주된 요인은 아니었다.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면, 월드컵 경기 관람이 투표를 할지 말지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진정한 이유는 주류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분노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도 그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난해 영국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41퍼센트가 투표하지 않았다. 얼마 전 프랑스 총선에서는 36퍼센트가 기권했다. 미국인의 절반이 2000년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민주노동당이 아직 기성 정당들에 대한 실재 있는 대안으로 비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제3당으로 떠오름으로써 이 상황은 변할 것 같다.

정치적 양극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치참하리만큼 참패했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겨우 4곳에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232개 선거

구 가운데 44곳에서 당선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완패했다. 정당 지지율은 29.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성 정당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실제 지지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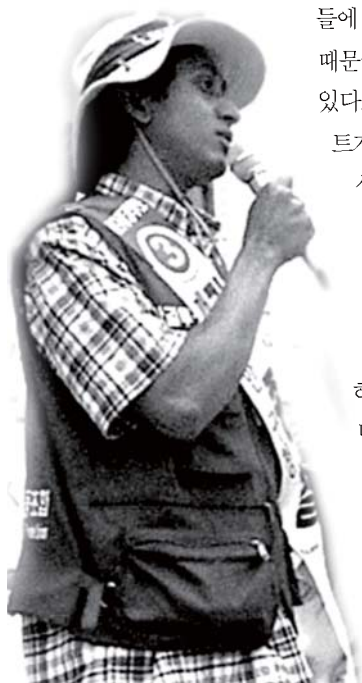
4년여 전에 민주당은 대중의 변화 염원 덕분에 집권할 수 있었다. 바로 그와 같은 대중 정서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핵심 모순은 그 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그 당이 추구하는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1997년에 대중은 한나라당을 거부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은 민주당에 대해 희망 섞인 관측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 내내 노동자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노동자들과 전투를 벌였다. 민주당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다. 김대중의 '개혁'은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것이 민주당이 위기에 직면한 가장 주된 이유다.

더 많은 사회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부정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대중의 개혁 열망이 일시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환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구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싶은 심정이 노무현으로 쏠렸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이러한 대중 정서가 근본적인 모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그것이다. 이미 대중의 정서 한가운데에는 두 가지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다. 과연 노무현이 진정한 개혁에 대한 염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과연 노무현이 집권해도 이회창보다 낫겠느냐?

이 때문에 노무현의 인기는 4월부터 급하강했다. 실제로 언론은 그의 인기가 떨어진 주된 이유로 그가 김영삼을 찾아가 제후를 의논했던 것과 김대중 아들들 비리에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을 꼽았다. 그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바람



은 잠잠했다. 이것은 <다함께>가 노무현 바람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신화 깨기 투쟁을 벌였던 것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 참패는 민주당의 혼란과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권의 일부는 김대중과 민주당(그리고 노무현)이 마치 관계가 없는 양 가장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한다. 선거 패배 직후 민주당 새신파는 민주당과 노무현이 김대중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함께>가 지난호에서 지적했듯이, “김대중 정부의 형편없는 인기 때문에 노무현이 김대중과 거리를 두려 한다면 여권은 더욱 분열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실정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한나라당은 50.6퍼센트의 정당 지지율을 획득해 민주당보다 3백93만 표 이상을 더 득표했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1곳을 석권했다. 광역 시도 의원 682석 가운데 467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의 압승 때문에 정치의 물결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상은 일면적이다.

민주당이 몰락하고 한나라당이 부상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진보 정당들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133만 9726표(8.1퍼센트)를 얻어 제3의 정당으로 도약했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얻은 표를 합하면 1백60만 표가 넘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에 대한 좌파의 도전을 표현함과 동시에 민주당 기반 일부의 좌경화를 표현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총선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의 전체 득표율은 1.18퍼센트였다. 사회당의 득표도 그 당의 협소한 기반에 비하면 인상적이다. 사회당은 26만 표(1.59퍼센트)를 얻었다. 199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얻은 표 수와 엇비슷하다.

민주당의 위기는 좌파가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진보 정치 세력, 특히 민주노동당의 성장은 민주당 정부의 위기가 낳은 왼쪽 그림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운동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머지 않아 벌어질 한나라당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정치 양극화 추세는 갈수록 심화하는 정치 위기에 서 비롯한 것이다. 그 결과 중도 정당(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났고 정치는 좌우로 양극화했다. 좌우 압력을 견딜 수 없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 반면,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이 득세했다.

이것은 국제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의 일부다. 예컨대, 유럽에서도 그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사회 민주주의 내 우파를 가운데에 놓고 우파와 사회 민주주의 내 좌파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점이 형태상으로 한국과 다르다.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 사회 민주주의 정당들은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13개 국에서 집권했다. 1년여 전부터 사회 민주주의 정당들은 차례차례 권력을 빼앗겼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파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좌파 사회 민주주의가 지난 5년 동안 선거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이 동독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서독 지역에서도 얼마간 지지를 얻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건 공산당은 반자본주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트로츠키주의 정당들, 스코틀랜드사회당, 영국 사회주의자 동맹 등 좌파의 선거적 도전이 존재한다.

급진화

이번 선거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민주노동당의 대약진이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8.1퍼센트의 지지를 획득했다. 울산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기초단체장이



됐다. 11명이 광역의원에 당선됐다. TV와 신문 등 언론의 의도적 따돌림과 부족한 선거 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민주노동당의 성공은 더욱 두드러진다.

민주노동당의 선거 성공은 더한층 심화하는 대중의 급진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YTN은 “민주노동당의 예상 밖 약진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념 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고 지적했다.

대중 급진화의 원동력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비록 올해 상반기에 발전 노조 파업이 패배했지만, 1997년 이래 노동자 운동은 꾸준히 성장했다. 파업 건수는 1998년에 129건, 1999년에 198건, 2000년에는 250건으로 늘어났다. 파업 손실 일수와 파업 참가 인원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노동자 계급은 자신감과 사기가 심각하게 꺾일 만한 결정적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것은 세계적 규모로 노동자 저항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95년 프랑스에서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이 있었다. 영국 노동자 운동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독일 금속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총파업과 3백만 명이 참가한 강력한 거리 시위가 있었다.

노동자 운동의 성장과 대중의 급진화 덕분에 “진보 정당에 대한 시각 변화”(<중앙일보> 6월 15일치)가 나타났다. 급진화의 표현들은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요 몇 달 새 여론 조사 결과들은 대중 의식의 급진화 사례를 자주 보여 준다. 발전소 매각, 공무원 노조, 미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 상당수 응답자들이 진보적 답변을 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대중의 급진화가 민주노동당에서 정치적 표현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그 덕분에 울산은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자체의 조직력과 무관하게 고르게 득표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선거 운동 역량과 거의 관계 없이 대체로 10퍼센트 안팎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노동당 득표분석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선거 결과는 당의 사회적 기반과 관련 있다. 민주노동당은 조직 노동자들의 단체인 민주노총의 공식적 지지를 받았다.

파업 행진을 벌이고 있는 독일 노동자들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성과는 민주노총의 전폭적 지원과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가 바탕이 됐다.”(<중앙일보> 6월 15일치.)

이 점은 사회당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사회당은 26만 표를 득표해, 역시 지지가 늘어났다. 그들의 엄청난 기대엔 크게 못 미쳤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사회당의 득표는 민주노동당에 크게 못 미쳤다. 무엇보다 사회당의 조직 노동자 기반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둔 선거구는 노동자 밀집 도시인 울산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28.7퍼센트였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43.2퍼센트를 획득했다. 두 명의 노동자 후보가 기초 단체장에 당선됐다.

울산 시장 선거 패배는 무척 아쉽다. 송철호 후보의 메시지는 계급적 색채가 모호했다. 심지어 송 후보는 우리당의 “주요 활동이 노동자들의 투쟁에만 맞춰져 있어서 경직되어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이 “시민 친화적인 모습으로 유연하게 바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말> 2002년 6월호.) 더욱이 대중적 원성을 사고 있는 민주당과 분명하게 선을 긋기보다는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이 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노동자 후보다운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매일노동뉴스> 6월 15일치.) 그 결과 노동자 밀집 지구인 북구와 동구의 투표율이 1998년 지방 선거나 2000년 총선 때보다 훨씬 떨어졌다. 득표율도 기대에 못 미쳤다. 북구에서는 54.23퍼센트, 동구에서는 55.84퍼센트밖에 얻지 못했다. 동구와 북구는 노동자 운동 출신의 후보들이 구청장에 당선된 곳이다. 노동자 운동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후보가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비슷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못 미치는 득표를 했다. 이문옥 후보가 25.3퍼센트를 득표한

반면, 서울시 정당 득표율은 6.06퍼센트였다. 이문옥 후보에게서 노동당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후보 자신도 “노동”보다는 “반부패”를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부패를 맹공격했다. 따라서 부패에 염증을 느끼는 노동자·서민을 끌어당기려면 계급적 접근법이 필요했다.

반면, 서울시 의회 비례

대표 후보들은 모두 노동자들이었다. 후보들은 “노동자의 서울”을 강조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렬하게 전투를 치렀던 서울에서 20만 9천42표를 얻었다.

부산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1067퍼센트(12만 1천72표)인 반면,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는 1686퍼센트(19만 2천9백54표)를 득표했다. 당 지지율보다 후보 득표율이 높은 이유는 후보 개인의 경력과 관련 있는 듯하다. 김석준 후보는 영남노동운동연구소장이고 영남 지역의 노동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인천에서는 당 지지율이 628퍼센트(4만 3천6백10표)인 반면, 김창한 시장 후보 득표율은 502퍼센트(3만 5천2백34표)였다. 김창한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회당 인천시장 후보인 김영규 교수와 관계 있는 듯하다. 김창한 후보보다 더 좌파적이고 노동 운동 지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김영규 후보가 우리 당 후보의 표를 얼마간 잠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계급 투표 성향이 드러났다. 기성 정당에 실망해 투표하지 않거나 사장들의 방해로 투표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랬다.(위선적이게도, 정부는 말로는 사람들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했지만, 정작 사장들의 투표 방해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 이미 2000년 총선에서도 나타났지만, 계급 투표 성향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 투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당(과 후보들)이 더 좌파적이고 노동 운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한편, 우리 당의 지역 득표 상황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 지역을 흔들었다. 당은 전라남북도와 광주에서 2위를 차지했다. 상당수의 김대중 지지자들이 왼쪽으로 이끌렸던 것이다. 또, 김영삼의 텃밭이었던 부산과 경남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서 우리 당이 얻은 지지도는 민주당과 맞먹는다.

군사독재 시절에 두 야당 지도자들의 핵심 기반이었던 곳에서 민주노동당이 급부상했다. 전통적으로 야성이 강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선전했다. 이 곳들은 모두 과거에 군사 독재에 맞선 저항의 중심지였다. 요컨대, 이 지역들은 지난 30년에 걸쳐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야당 지지에서 좌파 노동자 정당 지지로 좌경화해 왔다.

반면, 대구와 경북 그리고 충청도에서 우리 당은 세 기성 정당들보다 적게 득표했다. 이 곳은 박정희·김종필·전두환으로 대변되는 옛 여권의 아성이다.

전라남북도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송재구와 손주향)이 민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한때 김대중 지지자였다. 우리 당이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이들이 표를 가로채 갔다. 이 곳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노동당이 2위였다. 따라서 우리 당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후보들을 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후보들은 노동 운동의 지지를 받는 후보여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의 또 다른 특징은 정당 투표였다. “진보 정당의 기지개는 …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인물’ 위주에서 정당”으로 옮겨가고 있는 덕분이었다.(<한국일보> 6월 15일치.)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인물 중심’의 승부를 펼친 광역 선거[울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모두 실패했다.”(<한겨레> 6월 15일치.) 지명도 있는 개인에 의존하는 운동이 잘못됐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송철호 후보나 이문옥 후보는 정당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홍보 포스터에 민주노동당을 보일락말락하게 넣는 대신 ‘인물’을 부각했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은 그 성격상 모름지기 집단적인 운동이다. 민주노동당 운동은 노동자 운동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 당의 선거 운동도 집단적인 투쟁과 활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선거는 보여 줬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다함께”가 지방 선거 지원 활동에 초점을 맞췄던 게 옳았음을 보여 줬다. “다함께”는 서울 지역 15개 선거구와 인천, 부산, 원주, 진주에서 선거 지원 운동을 했다. 많은 회원들이 선거 연단을 이용해 진보적 대안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극소수였으나 일부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다소 시큰둥하거나 선거 지원 운동에 굶뒀다. 이것은 선거가 제공하는 기회를 외면하거나 선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은 기성 정당들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건설할 잠재력을 보여 줬다. 민주당은 예상대로 참패했고 광범한 분노가 존재한다. <다함께> 지난호에서 지적했듯이, “2000년 4월 총선과 비교해 지금은 김대중에 맞서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조건이 좁아 무르익었다.”

이것은 올해 대선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5년 전보다 훨씬 전진할 것임을 전망케 한다. 우리는 대선 때는 실로 전원이 전력 투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는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 한다. 주위의 지인들과 활동가들, 거리의 노동자와 학생들과 평범한 시민들을 민주노동당으로든 “다함께” 경향으로든 또는 둘 다로든 끌어당겨야 한다.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마다 시내 중심지에서 입당 원서를 갖다 놓고 가입을 받으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기성 정당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갈구하고 있다. 이런 대안을 건설하는 일부가 되자. 



우리는 변화 염원을 표현하러 했다



■ 부산시장선거

부산에서 여당은 한나라당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산은 한나라당 영향력이 막강한 도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조 4천억 원의 빚,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실업률, 교통난만을 부산 시민에게 안겨 주었다.

‘노퐁’으로 중무장한 민주당은 역겨운 부패 추문만 국민에게 안겨 주었다.

삶의 질 하락과 썩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41퍼센트라는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중 급진화의 한 표현이다. 특히 지방 선거에서 대중의 급진화는 민주노동당 급부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거 시작 전 4퍼

센트였던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시장 후보 지지율 16.8퍼센트, 정당 지지율 10.67퍼센트, 비례의원 1명 당선에서 잘 나타났다.

선거 기간에 우리는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우리보다 2~3배나 많은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과 같은 장소에서 유세할 때도 우리는 정치 주장이 담긴 큰소리와 울동으로 기세를 잡았다.

그 때문에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들은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2002년 지방 선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우호적인대중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박수원

■ 서울-종량2선거구 시의원 선거

종량구 제2선거구에서도 민주노동당 바람이 불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 김혜련 씨는 득표율이 10.2퍼센트였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종량구에서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으로 대중적 지지가 옮겨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선거 직후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 조사에서, 한나라당이 지방 선거에서 압승한 이유가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라고 답한 사람들은 8.3퍼센트뿐이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보수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사상 유례 없이 낮은 투표율이 그 증거다. 우리가 내세운 “민주노동당에 투표해 보수 정치 심판하자!”는 구호는 정말이지 시의적절했다.

‘선거’는 우리가 노동자들을 더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선거 전에는 연락하지 못하던 17개가 넘는 노동조합에 민주노동당을 알렸다.

우리는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선거를 활용하기도 했다. 합동 연설회와 정당 연설회 때 40일 넘게 파업 중인 정오교통노조의 현안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노조원 중 투표 참관인을 선정해 참관비 1백12만 5천 원 전액을 파업 기금으로 모았다. 선거 운동 자원자들을 모아 노조 지지 방문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는 높은 득표율뿐 아니라 신입 당원 증가라는 조직적 성과도 거뒀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무려 14명이 지구당에 가입했다. 그 중 12명이 노동자다. 그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뛰어넘는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선거 다음 날 정오교통노조 파업장을 찾아갔을 때, 노동자들은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에 감격해서 한 목소리로 “민주노동당!”을 연호했다. 아주 자연스럽게 민주노동당을 자신의 정당으로 여긴 것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동당이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보여줬다.

이종우

■ 강원도 - 원주2선거구 도의원 선거

지역 노동자 당원들이 열심히 선거 활동을 했다. 특히 만도기계 노동자들은 선거 기간 내내 적극 선거 활동에 결합했다. 마침, 선거 기간이 파업과 겹쳐 일부 노동자들은 지구당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교대로 선거 활동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 주었다.

하루는 한 상점에서 여성 세 명과 약 15분간 '노무현 현상'과 'IMF 극복'을 토론했다. 한 여성은 "민주당도 싫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노무현이 민주화 운동도 했고, 노동자들 편에도 섰다. 그래서 노무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 선거 운동원이 '노무현의 갈자(之) 행보'와 '노무현이 김대중의 님

은 꿀'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노무현이 결코 노동자·서민편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만 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IMF는 극복하지 않았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수줍어하던 한 노동자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김대중의 IMF 해결 방식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운동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만도기계 동지들이 작업장 쟁점과 사회 문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신정환

■ 서울 - 용산구청장 선거

우리는 용산 곳곳을 누비며 부정부패의 진정한 대안이 민주노동당임을 알렸다. 용산 미군 기지를 되찾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임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불평등한 삶에 복지를", "용산 미군 기지 반환", "부정 부패 척결"이라는 우리 당 후보 공약에 박수를 보냈다. 지구당을 직접 찾아와 당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리 선분을 감시하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여성도 선거

가 끝난 뒤 당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 구청장 후보 김종철 유세 차량이 골목 어귀에 나타나면 보수 정당의 선거운동원들은 "3번 또 왔다", "내가 지금은 이따를 두르고 있지만 구청장은 3번을 찍을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용산 구청장 선거 운동은 한때 "데모하는 정당은 싫다"던 사람들이 진보 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체험하게 해 줬다.

장우성

■ 서울 - 성동3선거구 시의원 선거

성동구는 후보가 일하는 인쇄 작업장을 포함해 노동 조건이 열악한 여러 영세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런 작은 작업장에는 노동조합도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힘주어 얘기한 정책은 "중소·영세 업체 노동자 복지 확대"였고 이것을 위해 서명 운동도 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 때문에 작업장에서는 서명 운동이 쉽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작업장 노동자들은 유인물을 열심히 읽고 서명도 잘 해 줬다.

선거 운동하러 맨 처음 찾아가던 곳은 현대자동차서비스였다. 작업장 노동 환경은 열악했는데도 이 지역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은' 곳이었다.

선거 운동에서 좋은 점은 슈퍼마켓 아저씨들, 영세 업체 노동자들, 과일 가게 아줌마들이 있는 동네에서 집집마다 찾아가 우리의 생각과 정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수 정당들의 선거 운동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은 흔히 선거 운동원들을 모두 '아르바이트생'으로만 여긴다. 그래서 "노동자·서민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당원"이라는 것을 꼭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은 "수고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 노동당이에요?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수고하십시오."

처음 며칠은 지하철역 등 출퇴근 길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후보 기호와 이름만을 외쳤는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하라", "미군 기지 반환하라", "노동자는 노동당에"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기로 선거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 뒤로 이 호소를 듣고 "열심히 하라"며 음료수를 주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황재민



■ 인천 시장 선거

민주노동당은 인천에서 시장, 부평구청장, 시의원 4명(비례대표 1명), 구의원 6명 등 총 12명이 출마했다. 정당 득표율은 6.28퍼센트, 인천 시장 후보 득표율 5퍼센트였다. 부평구청장 후보는 19.12퍼센트의 표를 얻었다. 인천은 선거에서 거의 매번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큰 지역이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전국 투표율 48.9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39.3퍼센트로 전국 최저다.

인천 지역 '다함께' 회원들은 유세단에서 활동했다. 새내기 한 명은 유세단 활동 하루 만에 '다함께' 회원이 됐다. 노동자 당원들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유세단에 결합했다. 선거 기간 내내 월차를 써 가며 활동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우리 당 인천시장 선거 슬로건은 '노동자여 단결하라'였다. 주된 구호는 '부패 정치 척결, 고용 안정 쟁취'였다. 계급 투표를 목표로 당을 알리는 것에 주력했다. 우리는 대우자동차, 대우종합기계, INI스틸, 동서식품, 주안5·6공단 사거리, 남동공단 입구 등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월드컵 기간에도 계속 파업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 집회에도 참가했다.

우리는 보수 정당 선거 운동원들이 기호와 후보자 이름만 외치는 것과 달리 우리 정책을 요약한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기성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설명했다.

우리의 연설에 적잖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15분 남짓 하는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최하란

■ 서울-성북1선거구 시의원 선거



이번 선거는 사람들의 정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성북구 주민들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노동당에 13.59퍼센트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다.

우리가 월드컵 응원 구호를 바꾼 구호에 맞춰 울동을 할 때였다. 옆에 있던 40대 남자가 팔짱팔짱 뛰면서 우리를 따라했다. 당원은 아니지만 전교조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분은 "기성 정치는 다 썩었다!"고 분개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찍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운동은 우리에게 활력과 자신

감을 주었다.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다. 처음엔 머쓱해 하던 당원들이 선거 마지막엔 다들 훌륭한 연설가가 돼 있었다. 민주노동당을 모르던 학생들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돌아갔다.

한 성신여대 학생은 우리 선거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민석 선거 운동 자원 봉사를 신청해 둔 상태였다. 선거가 끝난 지금 그 학생은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기성 정당의 가식적 행동과 달리 진보 정당의 주장은 진실이 느껴졌다. 그리고 진보 정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

여지연

[운동안의 논쟁1]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서총련 투표 전술을 비판한다

김민식

종종 낡은 주장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부활하곤 한다. 서울 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지지율이 민주당의 김민석을 앞지르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6·13 지방 선거 서총련 투표 전술'을 내놓았다. "서울 시장 선거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선 가능한 후보[민주당의 김민석]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이 회장 패거리들이 집권하면... 6·15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냉전 우파 정당인 한나라당은 박정희부터 김영삼까지 34년 동안 일당 독재를 통해 우리 삶을 망쳐 놓았다. 이 당의 재집권을 막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시장 후보 이문옥 지지대 학생 모임 깨끗한 손 fresh'(깨손 fresh)이 옳게 주장했듯이, "한나라당 낙선과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 지지는 분명 다른[것이다]."

서총련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것은 정확히 '차악' 논리다. 1932년 독일 대통령 선거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은 '차악' 논리를 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히틀러를 막기 위해 보수주의자인 힌덴부르크를 지지했다. 그러나 여섯 달 뒤에 힌덴부르크



는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했다. 그 10년 전에, 이탈리아 사회당은 파시스트 무솔리니를 막기 위해 자유주의 자들에 의지했다. 1922년 10월,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무솔리니 정부를 지지했다.

사실,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민주 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시장 개혁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을 폈다. ‘깨손 fresh’도 ‘김민석과 민주당이 낙선한다 해도, 그건 그들이 민중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정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 지지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은 출마하지 말고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실패를 공격하면서 우파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당이 민주당을 지지해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나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남으로 칼을 만들 수 없듯이, 민주당은 결코 수구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는 바다에 물 갖다 붓는 꼴이다. 바로 김대중이 지난 5년 동안 이 점을 여실히 보여 줬다. 그런데 또다시 과오를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비통해 하는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나라당이 이용하는 주장들의 허구를 폭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그런 사람들에게 현 상황의 진정한 대안을 보여 주어야 한다. 민주당에 표를 던지라고 촉구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1차 투표에서 나찌인 르펜은 2위로 떠오른 반면, 사회당 후보인 조스팽은 무너졌다. 수백만 명이 르펜에 반대해 거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시위대들은 르펜을 꺾기 위해 2차 투표에서 보수파인 시라크에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라크는 전에도 르펜과 뒷거래를 한 적 있고 앞으로도 르펜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와 뒷거래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시라크의 공화국연합은 우파의 승리를 위해 르펜의 국민전선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자본주의가 이윤을 수호하기 위해 르펜 같은 나찌에게로 돌아설 만큼 절박한 경제 위기를 겪는다면, 그래서 파시스트의 권력 장악을 원한다면 시라크는 기꺼이 나찌에게 권력을 넘겨 줄

것이다. 힌덴부르크나 이탈리아 자유주의자들처럼.

게다가 좌파가 시라크에 투표하는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좌파는 우파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르펜의 국민전선이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인민전선

서총련의 투표 전술은 우리로 하여금 1930년대 ‘인민전선’의 재앙적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인민전선’은 파시즘에 맞서 부르주아 정치 세력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국민 연합(계급 연합) 구축을 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와 노동자 등이 수구 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에 맞서 중도 우파 정당인 민주당(또는 그 당의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인민전선’은 모두 재앙으로 끝났다. 민중전선을 구성하는 세력들 간에 근본적 이해 관계가 충돌했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한결같이 토지·재산·교회·군대를 옹호했다. 그들은 파시스트 프랑코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이 제도들을 옹호했다. ‘인민전선’ 정부가 대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면, 가난한 농민 대중이 반파시스트 운동에 동참할 동기가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나 ‘인민전선’ 정부는 끝내 농민의 투쟁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토지 소유에 강력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대부르주아지가 이 반파시스트 연립 정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까탈루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을 때도, ‘인민전선’ 정부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사유 재산 침범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기업주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노무현)은 근본에서 사장들의 이익을 거스를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목표와 우선 순위는 노동자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사기업화를 밀어붙이고 대량 해고를 옹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지지 주장은 수구 세력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흔히 인민전선 옹호론자들은 좌파가 부르주아지를 전인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술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이다. 인민전선의 결정적 오류는 좌파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자본주의 정당의 통제에 종속시키는 것이(있)다. 그리하여 공동 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운동을 건설할 수 없게 만든 것이(있)다. 

**민주당 지지
주장은 수구
세력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
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총련을 합법화하라

장준석(광운대 공과대 학생회장 · 한총련 대의원)

고도근시 환자 박재범 씨(1999년 경기대 동아리연합회장)는 수배 4년 동안 치료를 못 받아 서서히 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유영업 씨(19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는 6년째 가족과 생이별 상태다. 아버지가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병문안 한 번 못 갔다. 지난해에는 외할머니 장례식에도 못 갔다. 1999년에는 주민등록까지 말소당했다. 한총련 대의원들이 겪는 비참한 수배 생활이다.

올해 3월 말까지 1백40여 명의 대학생들이 연행되거나 구속됐다. 대부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00년 국가보안법 구속자 1백28명 중 1백1명이 한총련 대의원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에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를 연행했다.

한총련은 김영삼 정권이 '이적 단체'로 규정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압받아,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학생 수만 8백여 명에 이른다.

1997년 초 한총련은 대선 자금 공개와 김영삼 정권 퇴진을 내걸고 싸웠다. 심각한 위기에 빠진 김영삼은 한총련 강령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이적 단체'로 규정해 마녀사냥했다.

김대중은 김영삼이 저지른 추악한 마녀사냥을 따라했다. 김대중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한총련을 희생양 삼고 있다. 한총련 대의



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는 김대중의 역겨운 말을 들으며 감옥으로 끌려갔다.

한총련은 이적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에 '이적' 규정의 핵심 근거인 '연방제 통일' 방안을 강령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통일 강령으로 채택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해 대의원들과 핵심 간부들을 수배·구속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10기 한총련은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무엇을 바꿔야 이적 규정에서 풀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대검찰청 공안과는 "한총련이 이적 단체로 규정돼 있어 10기 한총련에도 실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영삼 정부는 한총련을 '주사파 조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적 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총련은 주체사상에 동의하는 학생들만 있는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 한총련은 학생들이 스스로 결성한 학생회 연합체다. 한총련 회원은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10기 한총련 출범식에는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과연 그들이 모두 '주사파'고 북한 추종자인가? 한총련 출범식 참가자 다수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학생들이다.

일부 한총련 간부들이 북한을 남한의 대안으로 여기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을 지지하는 게 죄인가? 어떤 사회를 지지하는 그것은 토론과 논쟁할 문제지 사법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한총련 대의원이지만 주체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소수가 노동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사회를 보는 태도는 국가가 억압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토론할 문제다.

2년 전 김대중은 김정일을 만나 김정일을 "합리적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김대중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김대중이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위선이다.

한총련은 당장 합법화돼야 한다.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도 당장 철폐돼야 한다. 



환영받지 못한 탈출

정진희

얼마 전 중국 당국이 망명 신청을 하러 주중 한국 총영사관에 뛰어든 탈북자를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중국 공안(경찰)이 주중 일본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야만적으로 끌고 간 지 한 달여 만에 일어났다.

중국은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자 ‘총영사관 진입은 없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연행한 탈북자 원씨 석방과 대사관 난입 사과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남한 영사관 직원을 폭행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탈북자를 연행한 것은 이대로 두다가는 망명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올해 3월, 25명이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뒤 중국은 계엄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했다. 그러나 망명 시도를 막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8차례 총 21명이 남한 총영사관과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했다.

잇단 탈북자 망명 사건이 국제적 초점을 형성하자 그 동안 북한 난민 문제에 나몰라라 하던 미국이 갑자기 나서고 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북한 난민 연행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미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을 비판하며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지난 달 미국은 북한 난민 9명의 망명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게다가 결의안 채택 10여 일 전에 미국은 북한 난민의 망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법상 정치적 망명은 이미 미국에 있거나 국경에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 역시 역겹기 짝이 없다. 지난 달 일본 영사관에 중국 경찰이 난입했

을 때 일본 영사관측이 협조한 사실이 드러나 체면을 구기자 일본 정부는 “몰랐다”며 탈뺄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일본 시민단체 회원의 폭로로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회원은 일본 총영사관에 탈북자들이 진입하기 이틀 전에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일본은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1992~2001년) 일본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해마다 평균 1백55명뿐이었다. 실제 망명 허용은 더욱 낮아 26명에 그쳤다. 주요 30개국 가운데 최약이다.

일본은 지난 번 망명 시도 후에는 탈북자가 뛰어드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아예 영사관 문을 닫아 버렸다. 6월 8일 5명 망명 시도 직후 1미터 가량 열려 있던 철문을 완전히 닫도록 지시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모두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남한 정부는 겉으로는 ‘전원 수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다. 중국 경찰이 대사관에 난입해 탈북자를 연행하고서도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 큰소리 치는데도 정부 당국자는 “중국측의 입장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원만하게 처

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탈북자들의 망명이 늘어나면서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북자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6월부터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최대 50 퍼센트까지 삭감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쟁과 기아, 환경 파괴 등 자본주의가 낳는 재앙들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2001년 유엔난민담당관실의 자료만 봐도 전 세계 난민은 2천1백8십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체제의 희생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난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 통제 강화와 함께, 국내에 들어온 난민·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미국·일본·남한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북한 난민들을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골칫거리로만 여기고 있다.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자들이 북한 난민들을 구제할 리 만무하다. 그들은 오히려 국경 통제 강화로 노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주와 망명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둘 다 레드 카드

정병호

김대중은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증오가 누그러 지기를 바란다. 김대중이 그토록 월드컵에 목매단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김대중은 집권하면서 “부정부패에서 우리 사회를 단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의 막내 아들 김홍걸이야말로 가장 부패한 자다. 김홍걸은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뒤를 봐 준 대가로 시가 13억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챙겼다. 또, 관급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대원SCN, 성전건설에게 각각 수억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김홍걸이 받은 돈은 총 36억 원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전월세 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유학생 김홍걸은 LA에 12억 7천만 원짜리 호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또, 편도 3백16만 원짜리 비행기 특급 좌석을 수시로 이용했다. 김홍걸이 얼마나 호사스런 생활을 누렸는지 로스앤젤레스 교포들이 김홍걸 “축출 운동”에 나설 정도였다.

로비스트 최규선은 김홍걸이 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동대장 노릇을 했다. 최규선은 타이거풀스 송재빈과 김홍걸을 연결해 주는 등 김홍걸에게 로비 하려는 기업들의 창구 노릇을 했다. 이런 식으로 최규선이 김홍걸에게 건넨 “용돈의 규모가 9억 원에 이른다.” 이런 더러운 거래에는 전 서울시 부시장 김희완과 김홍걸의 동서 황인돈도 연루돼 있다.

빙산의 일각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규선이 폭로한 테이프에는 “대통령 하야... 나라가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선의 입을 막기 위해 청와대·국정원·경찰청이 총동원됐다.

최규선은 김홍걸뿐 아니라 김대중의 로비스트 노릇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는 김대중이 당선 한 직후 조지 소로스와 김대중의 만남을 주선했다.

최규선은 차기 전투기 구입 사업(F-X 사업)에도 개입해 이권을 쟁기려 했다.

최규선 게이트에는 이회호도 연관돼 있다. 이회호는 김홍걸이 포스코 회장 유상부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 줬다. 유상부는 김홍걸의 압력을 받아 한 국전자복권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라고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테이티에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포스테이티는 타이거풀스와 경쟁하고 있었다.

포스코는 2000년 초에 김홍걸과 최규선이 10억 달러 규모의 벤처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도 개입했다. “돈은 국제 금융계의 거물인 알 왈리드 왕자가 대고 포항공대가 투자 대상 벤처 회사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체계였다”(<시사저널> 5월 9일). 이 과정에 이회호가 연루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영부인 게이트”가 새로운 뇌관이 돼 집권 민주당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1백억 원대의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김홍걸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것은 아태재단 부이사장으로 있던 김대중 둘째 아들 김홍업의 비리다. 김홍업이 그의 로비 창구 노릇을 한 김성환과 거래한 돈은 공식으로만 33억 원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1백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또, 김홍업은 김홍걸이 뒤를 봐준 타이거폴스의 경쟁체인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의 뒤를 봐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편, 얼마 전에는 김홍업의 대학 후배 이거성이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그는 검찰과 금감원 조사 무마 명목으로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에게서 17억 원을 받았고, 기타 2~3개 기업에게서 수억 원씩 받아 챙겼다. 김성환과 유진걸은 기업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았다.

이렇듯 김홍업 주위에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검찰은 김홍업 수사를 월드컵 이후로 늦추겠다고 밝혔다가 대중의 원성 때문에 사흘 만에 철회했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검찰이 “민주당과 청와대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불평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아닌

김대중은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해 부패 문제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이미 김대중과 집권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비리로 얼룩진 민주당 정권에 대한 염증

기업주의 로비를 받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같은 정치 집단에게 부패 청산을 기대할 수 없다

을 대통령 후보 개인 [노무현]의 인간적 매력으로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가이 점을 잘 보여 주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사상 최대 표차로 참패했다. 한나라당은 부패에 염증을 느낀 대중의 정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야말로 원조 부패 정당이다. 이회창은 1997년 대선자금을 모으려고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했다. 그렇게 해서 현대·대우·동부·진로 등 25개 업체에게서 1백67억 원을 모았다. 한보 비리,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비리, 경부고속철도 차량납품사 선정 비리, PCS 사업자 선정 비리 등 한나라당은 앞장서서 부패를 저지른 당이다. 이런 당이 어찌 부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부패에 실망한 사람들 중에서 노무현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노무현은 부정 부패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노무현은 현 정부의 부패가 역대 정권에 비해 뇌물 규모가 적다고 변명한다. 또, 부패가 폭로된 것은 “민주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에 가능했다”며 부패 추문을 오히려 두둔했다. 한술 더 떠,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부패 구조가 개선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우긴다. 그러다 김대중 아들들의 비리가 터지자, 침묵했다.

노무현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부패 정권 심판”을 내걸자 “왕도독이 조그만 절도범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노무현 자신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타이거폴스 송재빈이 체육복표 사업에 뛰어들려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체육진흥법 개정을 부탁하며 전방위 로비를 했을 때, 노무현은 개별 정치인 중 가장 많은 액수인 1천만 원을 받았다.

노무현은 자기가 받은 돈이 “합법적 정치자금”이고 액수가 적다고 발뺌했다. 그렇지만 그가 기업주들에게서 로비를 받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결국 기업주의 로비를 받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같은 정치 집단에게 부패 청산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이 추진하는 시장 개혁은 곳곳에서 부정 부패를 부추길 뿐이다.

기성 정당들의 부패에 대한 환멸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지지하고 참여해 만드는 민주노동당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도 3위로 부상한 것은 이런 가능성을 보여 준다. 

부끄러운 지지

정진희

여성 해방을 위해 박근혜를 ‘활용’ 하자는 박근혜 활용론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꽤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박근혜 지지를 표명한 최보은과 재빨리 이를 지지한 장정임에 이어 <한겨레> 논설위원 김선주까지 박근혜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김선주는 4월 22일치 <한겨레> 칼럼에서 “여성들도 필요하면 박근혜 의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꽤 인기 있는 잡지인 <이프> 편집위원 이숙인은 박근혜 지지를 분명히 밝히

지는 않지만 박근혜에 거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여성 단체가 중요한 압력 단체가 되어 여성의 이름으로 그녀를 압박한다면 남자 후보들다는 더 많은 여성 정책을 획득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생각도 해 본다.”(<말> 2002년 6월호.)

박근혜가 신당을 창당해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보은과 장정임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지지론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들은 각각 <말> 6월호와 <사회평론> 여름호에 기고한 글에서 거듭 박근혜 지지의 ‘진보성’을 주장했다.

박근혜 ‘활용’론자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커다란 환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냉전 우익을 반대한다는 <한겨레>의 논설위원인 김선주가 뻔뻔스럽게 냉전 우익 박근혜를 지지하는 칼럼을 쓰며, “지나친 결벽주의를 버리고” 여성도 “지저분해”지자고 말하는 것을 보라.

박근혜 활용론자들이 박근혜가 냉전 우익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최보은과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장정임이 박근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구실을 해 왔는지 모를 리가 없다.

이들에게는 박근혜가 어떤 여성인지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여성이면 충분하다. 장정임은 노골적으로 말한다. “박근혜든 어떻고 누구면 어떻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최보은도 같은 생각이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학살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 계급 여성들이라도 상관 없다. 그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여성 우익들 — 매들린 올브라이트, 마거릿 대처, 최근 임명된 프랑스 국방장관 미셸 알리오—마리 —를 가리켜 “그들은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향해 여성도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을 할 능력이 있다는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혁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예찬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고양이가 쥐를 잡지는 않는

다는 데 있다. 이들은 여성이 억압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이해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여성의 이해 관계는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다. 주식만 2천4백69억 원어치를 가진 신세계 그룹 회장 이명희(삼성 그룹 이병철의 딸)가 신세계 백화점 여성 노동자와 이해 관계가 같지 않다. 서울 힐튼 호텔을 운영하는 대우개발 회장 정희자(김우중의 처)가 제작년 힐튼 호텔 파업 때 여성 노동자들에게 어떤 ‘자매애’를 베풀었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부와 특권이 있는 여성들에겐 맞지만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보은과 장정임이 손꼽아 기대하듯 여성 각료 자리가 증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여성에게는 출세길을 열어 줄지언정 대다수 여성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박근혜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쥐어짜 부자의 몫을 늘리는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이기 때문이다.

시장 정책과 여성들의 삶 향상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순전한 사기다. 신자유주의가 대다수 여성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4년 넘게 지긋지긋하게 경험했다.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많은 가정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은 여성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아이와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일이 개별 가정에 떠넘겨져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시장주의는 대다수 남성뿐 아니라 대다수 여성의 삶도 후퇴시키는 중대한 공격이다. 그런데도 장정임은 시장주의가 별 것 아닌 양, 박근혜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시장 경제 체제를 제외하고는 진보주의자들의 비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정임은 진보 진영 일부 남성들의 여성 차별 태도를 이유로 “민노당 사람도 민주당 사람도 한나라당 사람도 모두 그게 그거”라며 ‘여성 연대’를 목청 높여 외친다. 그러나 막상 그 자신은 지독한 여성 차별론자 조지 W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여성 학살에 지지를 보냈다.(장정임이 미국의 전쟁을 지지했다고 실토 한 것은 《말》 2002년 4월호에 나와 있다.)

박근혜 지지론은 그 겉포장이 무엇이든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지배 계급에 대한 투항이다. 최보은과 장정임은 자신들이 박근혜 대변인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사실 실제 대변인도 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 활용론’은 냉전 우익 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없애 주는 연막탄 노릇을 하고 있

너무나 편이한 두 여자의 일생

다.

박근혜 활용론은 망상일 뿐이다. 지배 계급 여성을 평범한 여성들더러 ‘활용하라’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활용하는가. 박근혜를 냉전 우익 정치인이 아닌 차별받는 여성 정치인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박근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에게 활용당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정진우(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진 등록 기간에 총 92개 국가 25만 5천9백78명(전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96.2퍼센트)이 신고했다. 그 동안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제도의 중요한 해결 과제인 '불법 체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법무부의 기막힌 선처(?)로 1년 동안 출국 준비 기간을 얻었다. 그 동안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해 왔던 연수 제도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가 또 하나의 편법을 자행한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등록을 받으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목할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15일 발표한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라는 정책 제안서(이하 제안서)다. 이 정책 제안서는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독소조항이 있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안

연수 제도가 낳은 폐해를 지적하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동연구원 제안서의 기본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제안서의 구체적 내용이 지나치게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맞춰진 데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가 '연수 제도와

고용 허가제를 병존하면서 사업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커다란 문제다. 그 동안 현대판 노예 제도인 산업기술제도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수많은 사례에서 드러났고 폐지 여론이 높음에도 연수 제도 온존을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이다.

둘째, 제안서에는 '원칙적으로 직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장이동을 금지하면 인권 침해·폭행·부당 해고·차별 대우, 사용자측 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강제 노동이 이뤄질 수 있다. 사업장 이동 금지의 고용허가제의 내용 중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셋째, 제안서의 귀국 보증금 등의 조항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귀국을 전제로 한다. 귀국 보증금은 강제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을 막기 위한 감시 대책일 뿐이다. 기존 산업 연수 제도에서 강제 적립금이 연수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 독소 조항이었으므로 새로 도입하는 제도에 결코 포함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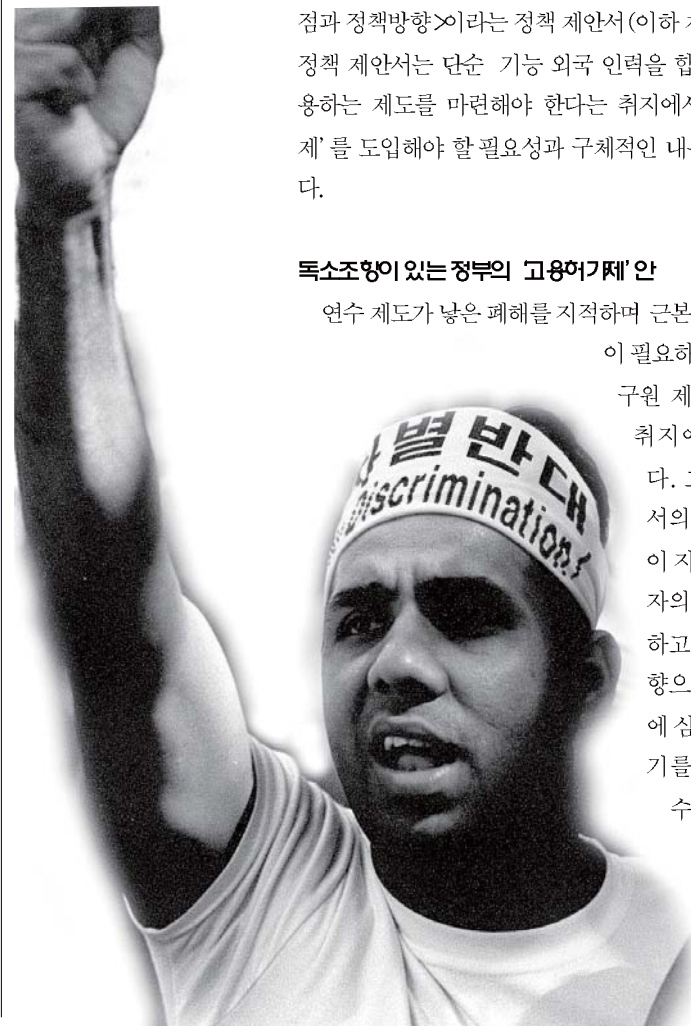
이처럼 제안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제시한 '노동허가제'에 턱없이 모자라는 내용일 뿐 아니라 노동부가 지난 2000년에 발표한 '고용허가제'보다도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다.

연수제도 확대·추가도입 움직임

노동부는 고용 허가제가 중심인 외국 인력 제도를 모색하는 한편, 현행 연수 제도를 확대·강화하려 한다.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는 '산업 연수생 4만 명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면 기업체 인건비 부담이 1인당 월 37만 원 가량 증가한다는 이유로 연수 제도의 온존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진등록을 강요하고 월드컵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외국 인력 정책 방향이 제각각이다.

외국 인력 정책을 일방적으로 '노동자 관리와 통제



구속 사유가 범법성을 입증하기보다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이 슬픈 사례를 눈여겨 보자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2002년 5월 7일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전지윤 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전지윤의 구속도 구속이려니와 구속 사유가 나한테는 충격이었다.

먼저 월간 <다함께>에 실린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글에서 병역 비리를 비판한 부분이 사회 변혁의 필요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지윤은 “특별 검사를 임명해 고위 공직자와 그 자식뿐만 아니라 이들과 정치 자금 등으로 연결된 지역 유지, 기업인, 언론사 간부, 군기관 등 거대하게 얹히고 실킨 병역 비리의 부패 사슬을 철저히 밝혀 내야 한다.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고 썼다.

둘째, 민주노동당 성공회대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쫓선은 꺼져라’라는 제목으로, “오히려 우리는 <조선일보>와 선명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보며 노동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쓴 부분이 “마르크스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 미군 철수 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1999년 전지윤 학생이 구속됐을 때 최후 진술한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전지윤은 “정리해고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해 온 저는 사상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봉건제가 그랬듯이 자본주의도 영원 불변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과 불평등과 대량 실업을 낳는 이 체제가 인류 본성에 부합하는 최선의 체제라고 하면 그것은 인류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추장스럽고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더 발전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타파와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 고무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 정치 토론회 참석을 권유하기 위해 쓴 글이나 메이 데이 집회 참가를 권유한 글에서 몇몇 부분을 경찰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 삼고 있다.

나는 특별히 세 가지 구속 사유가 1987년 이후 15년 동안이나 민주주의가 진전된 이 마당에, 더구나 50년 만의 야당 정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첫번째 구속 사유인 병역 비리에 대한 비판은 전지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안보와 국방을 소리높여 외치는 사회 지도층들이 각종 불법적 방법으로 자식들의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했고 실제로 면제받고 있음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2002년 2월 6일치 <한겨레>에 진중권 씨가 쓴 칼럼, “안보의 침범 김

용갑 의원계”는 반공과 안보를 외치는 김용갑 의원의 자체들이 병역 면제된 것을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보를 높이 부르짖는 사회 지도층이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런 비상식적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가 된다면, 그것은 전지운의 불법성을 드러내 주기보다는 국가보안법의 비상식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지운 학생의 글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이런 취지의 비판 글을 써온 시민·사회 단체들도 문제 삼아야 한다. 일찍이 병역 비리 명단을 고발 폭로했던 ‘반부패국민연대’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병역 비리를 철저히 밝히려고 촉구한 ‘참여연대’(2001년 2월 13일 논평), 그리고 병역 비리를 폭로한 《말》(2001년 6월호)과 <시사저널>(2000년 5월 10일치) 기자들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구속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판한 두번째 구속 사유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조선일보>를 비판한 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것이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도 아닌 국민의 정부 시대에 구속의 ‘구’ 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조선일보 반대 운동은 대단히 소수의 운동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안티조선 운동은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동참하는 운동이 되고 있다. 가장 냉전적이고 수구적인 논리를 대변하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언론계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사퇴 요구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6월 13일 현재 2천7백50여 명의 기자들이 서명했다.

전지운 학생은 자신의 글을 통해 ‘평범한 우익 신문’이 아닌 ‘특별한 극우 신문’으로서의 <조선일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을 표현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친일 매국노에 의한 창간이라는 배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좌파 기자들이 근무하던 기간의 폐간을 들어 마치 애국, 민족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의 거짓된 모습들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방응모 회장의 친일 행위들은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밤의 대통령’ 행세하며 언론의 위력을 무기 삼아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조선일보>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위를 고발하는 취지에서 글을 쓴 것이다. 이것을 ‘마르크스노선의 정당화’ 등으로 끼워맞추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경찰은 전지운 학생이 쓴 글이 학자나 시민 단체들이 행하는 비판과 다르다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사안이 되어 버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격한 언어로 기술했다고 하여 그것을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지운 발언 정도의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아 구속한다고 하면 아마 수만 명의 학생들을 구속해야 할 것이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법정 최후진술 내용을 구속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재판정에서 전지운 학생이 했던 최후진술문을 3년이 지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전지운 씨는 헌법(형사소송법 303조)이 보장하는 최후진술권을 행사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지운 학생의 최후진술 내용까지 모두 고려해 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구속 사유로 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전지운의 구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일 뿐이다.

나는 장황하게 전지운 학생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나는 이러한 구속 사유들을 검토하면서 이는 전지운 학생의 범법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처벌 규정의 시대착오적 성격, 나아가 경찰의 냉전적 사고를 말해 준다고 생각했다. 또, 전지운 구속의 적법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부당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속 사유가 구속한 사람의 범법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 자체의 부당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의 법의식 자체를 혼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전지운 구속 사례는 검찰이 그래도 사법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전지운 구속 사태와 사유를 보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가 복원되고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와 의식이 현재에도 엄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 또 경찰과 검찰의 영역에 민주주의 ‘햇볕’이 더욱더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학술적인 견지에서 나는 이러한 결과가, 1987년 이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고, 그리하여 과거 권위주의 국가 기구와 요원들, 억압적 법 제도, 반민주 의식과 행태가 철저히 극복되지 않은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3장 참조).

전지운 학생에 대한 판결은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나 재판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경찰의 행태를 그래도 재판부가 재검토하기를 소망한다. 검찰과 판사들이 이러한 구시대적인 경찰 의식과 행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는 확신이 서지 않지만, 더운 여름 찜통 같은 감옥에서 고통받을 제자를 생각하면서 정말이지 나의 기대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전지윤을 석방하라



2002년 5월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가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원인 전지윤(사회학과 4학년) 씨를 연행·구속했다.

검찰은 전지윤 씨가 월간 <다함께>와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쓴 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전지윤 씨가 쓴 글은 병역 비리를 비판하고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글들이 “사회 변혁의 필요성을 선전·선동”한 것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완전히 억지다.

전지윤 씨보다 먼저 병역 비리 명단을 고발한 ‘반부패국민연대’, 특별감사제를 도입해 병역 비리를 철저히 밝히려고 촉구한 ‘참여연대’, 병역 비리를 폭로한 <말>과 <시사저널> 기자들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취재·인터뷰 거부를 선언한 지식인 1천5백75명도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셈이다.

우리는 전지윤 씨 구속을 보면서, 그동안 보안 경찰이 성공회대학교 인터넷 카페에 올랐던 글들을 수시로 검열해 온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여전히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적 감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지윤 씨 구속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전지윤 씨를 구속한 것에 반대한다.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의 국가라면, 아무나 “<조선일보>를 반대한다”고, “병역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전지윤 씨는 지금 당장 석방돼야 한다.

전지윤을 석방하라!

인터넷 검열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성공회대 교수>

성공회대 총장 김성수

성공회대 부총장 양권석

성공회대 총무처장 김영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동춘, 정해구, 조효제, 신정환, 조희연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한홍구, 고병헌

성공회대 유통정보학과

교수 박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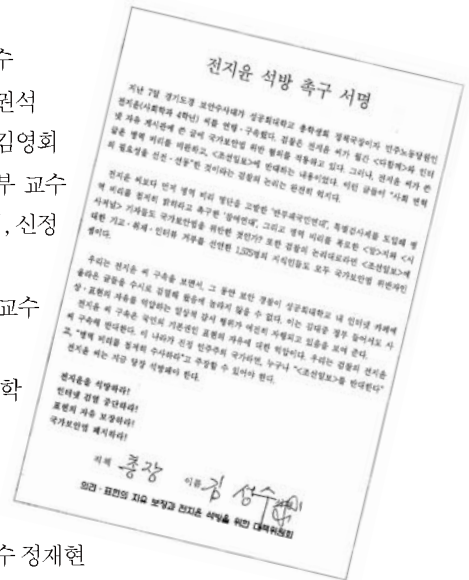
성공회대 디지털 컨

텐츠 학부 교수 김용호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 정재현

성공회대 영어학과 교수 김성찬

성공회대 국어과 강사 박현수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장 직무대행 백순환 외 14인/전

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용백

외 7인/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직무

대행 양한웅 외 6인/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수

호 외 24명/전국공무원노

동조합 위원장 차봉천/전

국교수노동조합 위

원장 황상익/전국금속

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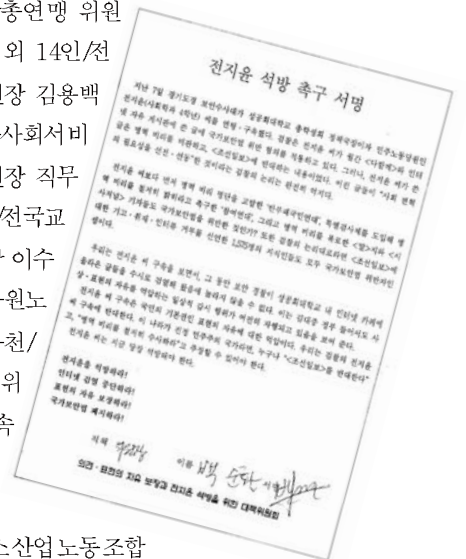
재환/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김형근/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

원장 이용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형탁/전국금

융산업노동조합 통일위원장 박창완

그 외 19인



<시민·사회·종교>

조선일보보내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임종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최민희 외 1인/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오종렬/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전국연합 공동의장 노수희/항린교회 담임목사 홍근수/노동일보 발행인 오충일/색연합 사무처장 김제남/주한미군법죄권절운동본부 상임의장 문대골 외 1인/조국통일범민족연합 문재룡/국제연세스티 한국 지부 사무국장 오완호/다산인권센터 대표 송원찬/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고근예/동국대 교수 강정구/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하순/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김해성 외 2인/노동인권회관 부소장 석원정/원불교외국인센터소장 최서연/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실장 정진우/바른지역언론연대 사무처장 김철관/평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홍식/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임태훈/생명선교연대 조정현/변호사 박승옥/통일문제 연구소 백기완/전민련 의장 김홍현/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노동가수 최도은

<정당>

사회당 대표/사회당 서울시장 후보 원웅수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부대표 김혜경,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노회찬/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문옥/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준기/민주노동당 용산구청장 후보 김종철/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김창희/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최규엽/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최현숙/민주노동당 기획위원회 차장이

성필/민주노동당 사무국장 박권호/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 이승현/민주노동당 정책부장 송태경/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 김혜련/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인식, 강철구/민주노동당 인천지부장 김창한/민주노동당 강남갑 지구당 위원장,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위원장 이선근, 부위원장 이정구, 조미선/민주노동당 광진을 지구당 위원장 이해삼, 운영위원 원희영/민주노동당 노원을 지구당 위원장 정윤광, 부위원장 진상우/민주노동당 동대문 갑 지구당 위원장 이영남/민주노동당 서대문 갑지구당 위원장 조은주, 사무국장 정

현정/민주노동당 성동지구당 위원장 최창준, 신재영/민주노동당 성북갑 지구당 사무국장 김병석/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 이원재

<학생>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장 박재승 외 9인/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선근 외 2인/고려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장 조혜영 외 9인/단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선미 외 7인/광운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진혁 외 2인/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주진완 외 39명/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구정모, 부총학생회장 이석영 외 51인/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성준, 부총학생회장 박범 외 8인/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장 김건표, 부총학생회장 박두서 외 20인/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채희영 외 4인/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유수진 (4기 전학협 의장), 부총학생회장 임덕영 외 7인/인하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이동훈 외 3인/한국의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재연, 부총학생회장 강길수 외 8인/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학생회장 김국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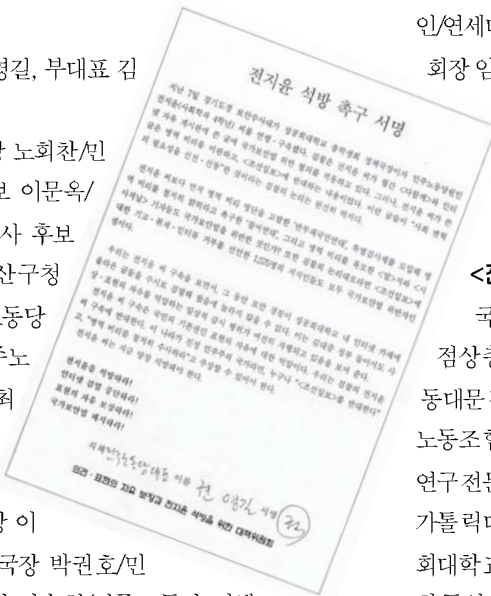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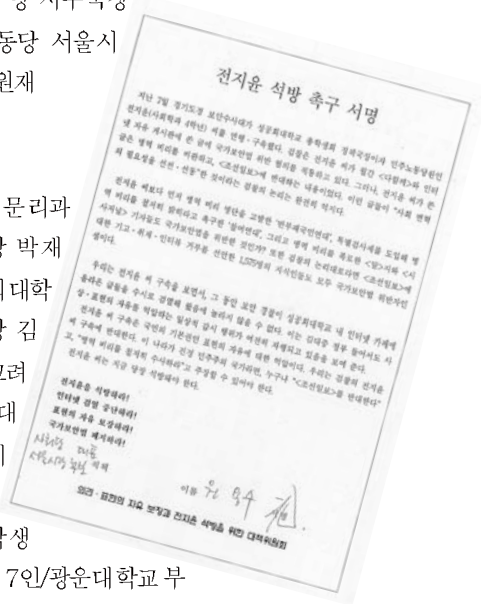
<전지윤 석방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제10기 서남총련(준)/전국노점상총연합/다함께/민주노동당 성북갑 지구당/민주노동당 동대문 갑 지구당/전국대학생조선일보보내대모임/동명기술공단 노동조합/성바오로 병원 노동조합/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연구전문 노동조합/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동대문청년회/가톨릭대총학생회/고려대 법대학생회/경희대 총학생회/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시립대 총학생회/한국의국어대학교총학생회/통일 연세 6·15 실천위원회/순천향대 9대 간호학과 학생회/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지윤 재판에 참가합니다

7월 8일(월) 오전 10시 수원지법 본관 110호

당일 오전 9시에 수원지법 앞에서 석방 촉구 집회가 있습니다.



국민적 단결 신화를 어떻게 보는가?

TV와 기성 신문은 월드컵 대회를 이용해 민족주의를 한껏 부추긴다.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월드컵이든 학교의 역사 수업이든 병역 의무든 압력은 언제나 똑같다 — 너는 한국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국민이다. 우리 나라가 최고라고 믿어라.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도 모두 자국의 우월성을 믿도록 교육받는다. 어디서든 그렇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하지만 지배자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애국심이 모든 사람의 몸에 배어 전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애국심은 우리 나라 사장과 노동자가 다른 나라 사장과 노동자에 대항하는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또한 애국심은 국가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한다. 이것은 착취자가 피착취자를 계속 지배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가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이유다. 마르크스주의는 세계를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계급의 관점에서 본다. 즉, 세계는 근본에서 국가가 아니라 계급에 따라 분열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내부의 계급 대립이 없어져야 국가 상호 간의 적대적 대결도 사라질 것이다.

국민 국가의 틀을 받아들이는 기성 정치인들과 일부 개혁 지상주의자들은 IMF 관리 체제 초기에 “우리 경제를 살리자”, “우리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만들자”고 외쳐 댔다. 하지만 이 말은 잘못됐다. ‘우리’ 경제, ‘우리’ 나라는 없다. 둘 다 지배 계급의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우리 나라”를 이야기하는

개혁 지상주의자들은 스스로 지배 계급의 포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 같은 생각을 노동 계급 내에서도 강화한다. 부르주아지는 노동 계급을 자신에게 묶어 놓기 위해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노동 계급은 자신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

근본 변혁이 한 나라 안에서만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주의가 필요하다. 사회 근본 변혁이 일국에서 고립되면 세계 규모의 군사·경제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그 나라는 세계 자본주의의 경쟁 압력 때문에 자본주의 방식을 다시 도입하게 될 것이다. 계급 착취와 차별과,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이 부활할 것이다. 1920년대 말 옛 소련의 사례가 이것을 입증한다.

국제주의는 일상의 노동조합 투쟁에서조차 점점 더 불가피해지고 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다국간 기업에 맞서는 최선의 방어는 노동조합 현장 활동가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단지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국제주의는 수입 규제 정책을 거부한다. 수입 규제 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보복으로 인한 경제 재앙을 부른다. 그뿐 아니라, 한국 지배 계급에 대항한 고용 안정 투쟁이, 일본·홍콩·독일·프랑스 등의 노동자들에 맞서 ‘우리 나라’ 사장들을 지지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뒤바뀌어 버린다.

진정한 국제주의는 민족·인종적 편견을 버리고 전 세계 국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상을 뜻한다. 국제주의는 ‘인류 형제주의’(혹은 ‘인류 자매주의’)를 믿는 문제가 아니다. 마르크스 국제주의의 기본 요소는, 사회가 적대적 이해 관계를 가진 계급들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형제인 것도, 모든 여자들이 자매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국제주의는 세계를 그저 국민 국가 사이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자본주의에 맞서는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투쟁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국제 노동 계급 전체의 이익이 지역과 국가에 따라 분할된 단기적인 이익보다 먼저라고 본다. 이와 같은 국제주의는 대중 매체에서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떠드는 정책들과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의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온 국민이 월드컵 대회에서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을 외치며 한국 팀을 응원하고 있다. 이를 지켜 보다 보면 과연 사람들의 민족주의 관념이 바뀔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흔히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동차, TV, DVD 플레이어를 갖고 싶어한다. 그들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가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들은 때때로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자본주의는 그 존재를 정당화하는 관념을 쏟아 낸다. 그리고 일상 시기에 대다수 노동자는 이러한 관념을 받아들인다. 19 세기에 칼 마르크스는 “지배적인 관념은 지배 계급의 관념”이라고 말했다. 학교, 기성 신문, TV는 소수 특권층만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댄다. 이런 생각은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국가는 중립적이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지켜 준다고들 한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과 자원을 얻으려고 경쟁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 사회 최상층은 민족주의, 인종 차별, 성 차별 관념들을 부추겨 사람들을 분열시킨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역사 내내 노동자 투쟁은 거대한 반란으로 분출했다. 이런 분출에는 1871년 프랑스, 1917년 러시아, 1920년 이탈리아, 1936년 스페인과 프랑스, 1972년 칠레, 1975년 포르투갈, 1979년 이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1998년 인도네시아, 2000년 세르비아,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정부를 전복한 대중 봉기가 있었다.

이런 격변들은 자주 위기에 빠지는 자본주의 자체의 본성에 의해 더욱 격화된다. 자본주의는 모두에게 번영을 약속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 침체기에는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공격한다. 자본주의 관념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런 공격을 많은 부분 수용한다. 그러나 그들이 더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

그 때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노동자들은 사장들이나 정부에 대항해 행동한다. 소수 노동자들은 언제나 그 사회의 지배 관념을 거부한다. 대중 투쟁이 벌어지면 이 소수의 견해에 공감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난다.

노동자들은 전에 받아들인 관념들과 모순되는 실천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소규모 투쟁에도 해당하는 얘기다. 그러나 대규모 전투가 벌

1917년 동부전선에서 서로 총뿔리를 겨눴던 러시아와 독일 병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어질 때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 남 · 여, 흑인 · 백인, 동성애자 · 이성애자 사이에, 그리고 민족 간에 분열을 낳는 낡은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분열은 노동자들이 공동의 적 — 사장이나 정부 — 에 맞서 단결하면 사라질 수 있다. 자본주의는 사장들이 공장, 사무실, 작업장을 통제하고 국가 권력을 지배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컨대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에 맞서 공장 점거에 돌입해 사장과 충돌하면 정부와도 충돌하게 된다. 사장은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자기 재산을 “되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장에게 도전한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윤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을 방어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스스로 조직하기 시작한다.

노동자들은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파업이 벌어질 때 전에는 자신없어하던 사람들이 노동자 대중 집회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하자고 호소하는 연설을 한다.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전략 · 전술을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다. 대규모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민중이 어떻게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대규모 저항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뿐 아니라 사람들도 변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체제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국내에서 벌이는 전쟁



강철구

조지 W 부시가 애써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이 탄로났다. 부시 일당이 9·11 테러 전에 항공기 납치 음모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5월 13일치 <뉴스위크>는 FBI(연방수사국)와 CIA(중앙정보국)가 9·11 테러를 예방할 수도 있었던 술한 정보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처음에 이를 일축했다. 부시는 오만하게 “FBI는 할 일을 다했다”고 말O했다. 그러나 FBI 요원 롤리는 9·11 테러 직전에 FBI 본부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색 영장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궁지에 몰린 부시는 테러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부시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전쟁 준비와 경찰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부시는 6월 6일 “본토 방어는 대통령의 지상 과업”이라며 국토안전보장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전보장부는 17만 명의 인원에 1년 예산이 3백74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하는 공통 기구가 될 것이다. 국방부에 이어 두번째 거대한 정부 부서다. 국토안전보장부는 FBI와 CIA를 포함한 9개 기관의 대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국토안전보장부는 테러를 결코 근절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테러의 원인이 되는 고통과 분노, 절망과 좌절을 더욱 키우는 부시의 전쟁 물이 도구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대한 공격

부시는 계속 아랍인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9·11 테러 뒤 2천여 명이 구금됐다. 기소나 재판 절차도 없었다. 구금된 대다수는 평범한 아랍 청년들이었다. 뉴저지에 사는 이집트인 모하메드 오마르(19살)는 단지 탈레반 최고 지도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류됐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아랍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아랍인뿐 아니라 “테러와 연관된 나라”의 국민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한다. 약 35개 국가 국민들은 미국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다. 미국 정부는 방문자들의 체류 시한도 현행 6개월에서 30일 안팎으로 줄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유학생 온라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의 한 인권 단체는 “빅 브라더의 ‘21세기 전체주의’가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존 에슈크로프트는 5월 30일 “FBI 요원들에게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 장소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FBI는 이제 정치·종교 단체를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다. 전화를 도청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와 채팅방 등도 사찰할 수 있다.

부시의 더러운 책략

6월 9일 부시는 자국민 압둘라 알 무하지르를 “적의 전투 요원”이라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 존 에슈크로프트는 무하지르가 “더러운 폭탄” 공격을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하지르가 테러를 준비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진실을 알 수 없을지 모른다. 변호인 접견이 금지됐고 재판도 열리지 않

을 계획이다.

6월 11일치 <타임>은 “압둘라 알 무하지르가 구체적인 테러 음모를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도 “실제의 테러 계획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부시는 무하지르가 테러를 “구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무기한 구금하려 한다.

그러나 테러를 “구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테러를 실제로 저지르는 자

들이 부시 일당이다. 미국의 전쟁광들은 세계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은 핵무기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는 핵전쟁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악한 지배자들을 후원했다. 또,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조성한 무하지르의 “더러운 폭탄” 위협은 얼마나 더러운 사기극인가.

미국 시민자유동맹의 로라 머피 국장은 “9·11 테러를 예방하는 데 실패한 FBI가 도리어 이를 빌미로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권을 파괴하려 한다”고 ‘FBI 개혁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FBI 국장 로버트 뮐러는 “반테러 활동에 한정해서만 엄밀하게 국내 감시 권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테러와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억압을 보면 뮐러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FBI의 추악한 역사는 FBI가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시민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76년 미국 상원 보고서는 당시 FBI가 50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저명한 흑인 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해 존 스타인벡, 어니스트 헤밍웨

이 같은 유명한 소설가도 감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FBI가 작성한 1만 5천 명의 “보안 대상자 목록”에는 반전 운동가, 사회주의자, 흑인 해방 운동가 등 대부분 좌파 성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국가 비상시” 기소나 재판 없이 체포될 운명이었다. 1969년에 급진 흑인 단체인 흑표범당의 지도자 프레드 햄프튼과 흑표범당원 마크 클라크가 기관총으로 무장한 시카고 경찰들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FBI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폭로된 정보기관의 파렴치한 행위에 미국 시민들은 아연실색했다. 대중의 불신과 압력에 떠밀려 FBI는 “국내 첩보 수집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FBI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26년 만에 시민적 자유를 유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마틴 루터 킹은 1967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남에 있는 폭탄이 국내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전쟁이 국내 정치 억압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꼬집은 말이다.

국민이 전쟁의 동기와 비극적 참상을 알게 되면 전쟁에 대한 지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권력자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이 바로 그랬다. 미국 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전 운동은 미국 군대가 베트남에서 물러나도록 만들었다.

부시는 반전 운동의 싹을 제거해야 “끝없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시가 미국 내에서 정치 억압을 강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럽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이수현 지난 6월 9일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대로 시라크가 이끄는 우파가 승리하자, 유럽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유럽연합(EU) 15개 국가 중 13개 국가에서 '좌파'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집권했다. 그러나 지금은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우파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다. 또, 각국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다.

지금 유럽에서 성과를 거둔 우파 정당들은 극우파를 본떠 난민 반대나 범죄 '근절'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한 정당들이다. 네덜란드 기독교민주당은 펴트 포트타운이 한 주장을 그대로 흉내냈다. 독일 기독교민주당은 총리 후보로 강경 우파인 에드문트 슈토이버를 선출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심각한 지지율 하락과 이데올로기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당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들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자기 지지자들, 특히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해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이런 배신은 노동당 소속 총리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조스팽도 임시직과 계약직을 늘려 고용 불안을 증대시켰고, 전임 우파 정부들보다 더 많은 기업을 사유화했다. 지난 달 네덜란드 노동당 연립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한 주된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병원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통 체계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4~5년 전에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집권하게 만든 좌경화 물결이 지금은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있다.

사실, 몰락한 사회민주주의 정부와 새로 집권한 보수 우파 정부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스페인의 아스나르나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같은 우파 총리들과 영국의 총리 토니 블레어가 추구하는 정책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들 모두가 난민과 이민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 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복지 혜택을 공격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추진한 조치들 때문에 노동 조건이 나빠지고 살기가 더 힘들다고 느낀다. 사람들이 그런 '좌파' 정당들을 외면한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최근 눈에 띄게 높아진 선거 기권율로도 나타났다. 작년 영국 총선과 6월 9일 프랑스 총선에서 기권율은 각각 41퍼센트와 36퍼센트나 됐다.

양극화

지난 5년 동안 유럽의 다양한 좌파 조직들이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었다.

작년 영국 총선 직후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노동당원 전례 없이 많은 표를 극좌파에게 빼앗긴 듯하다. 유권자들이 이렇게 파편화하는 현상은 전후 영국 정치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5월 지방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동맹(SA)이 얻은 표는 지난해 6월 총선 결과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은 옛 동독 지역에서 상당한 표를 얻고 있고 옛 서독 지역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이탈리아의 리폰다찌오네(재건 공산당)는 반자본주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트로츠키주의 정당들인 노동자투쟁(IO)이나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LCR), 스코틀랜드 사회당, 영국의 SA가 모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극좌파의 선진도전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정치를 단순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선거 제도나 구조로 환원할 수 없다.

선거에서 극좌파가 거둔 성공은 더 심오한 차원의 급진화를 반영한다. 노동계급의 저항이 성장하고 있다.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3백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하루였지만 1천3백만 명이 총파업을 감행했다. 독일 금속 노동자들은 중요한 임금 인상 투쟁에서 승리했다. 더디긴 하지만 영국 노동자들도 전투성을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럽의 변화는 정치 일반의 우경화가 아니라 정치 양극화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극좌파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스팽이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주에 사회당은 입당 신청을 1만 5천 건이나 받았다고 밝혔다. 르펜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사회당이 반파시즘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다.

정치 양극화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대중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이것은 갑작스런 정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극좌파가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 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 때만 사회민주주의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위험이 있다. 하나는 사회민주주의가 노동계급 운동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영향력에 굴복해, 자신의 지론과 다르게 실천상으로 추수(뒷꿈치나 쫓기)하는 것이다. 독일 PDS는 베를린 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그러나 베를린 시의회는 건축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스팽의 '복수 좌파' 연정에 참여한 녹색당 지도자들은 지금 새로운 '복수 좌파'에 합류하라고 극좌파에 요구하고 있다. 조스팽의 잘못을 고스란히 반복하라는 것이다.

지금 체제에 대한 반감과 불만은 널리 퍼져 있다. 무엇보다도 반자본주의 운동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젊은이들 수십만 명이 점점 더 커다란 반체제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3월, 50만 명이 참가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위는 작년에 30만 명이 참가한 제노바 시위 규모를 뛰어넘었다. 올해 영국 런던의 메이 데이 시위는 노동조합원들과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단결한, 몇 십 년 만에 벌어진 최대 시위였다. 지난 달 독일 베를린에서는

부시의 방문을 반대하는 두 차례 시위에 각각 10만 명과 5만 명이 참가했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9·11 사건으로 약해지기는커녕 부시가 벌이는 전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투쟁으로 더욱 달아올랐다.

6월 20일 스페인에서는 노동 기본권과 실업자들을 공격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벌어졌다. 또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깃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했다. 런던에서는 난민 방어 시위와 행진이 있었다. 이런 시위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운동의 일부다. 그 운동은 희생양 만들기, 전쟁, 공공 복지와 연금 공격,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한다. 바로 이런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야말로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음울한 미래와는 사뭇 다른 미래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이다. 

에이즈, 자본주의, 세계화

안진형

2002년 4월 16일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1~3월 국내 에이즈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보건원 관계자는 젊은 이들의 성 개방 풍조 때문에 20~30대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개방 풍조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에이즈는 단지 성관계를 통해서만 걸리는 병이 아니다. 에이즈는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돼 어린 아이가 환자인 경우도 흔하다.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를 맺는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에이즈는 분명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에이즈 말고도 치명적인 질병은 많다. 예컨대 만성 간염과 에이즈는 특징이 비슷하다. 그러나 간염 걸린 사람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에이즈를 둘러싼 이데올로기는 가족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성을 억압하는 주장들로 가득 차 있다.

미국 국립 질병통제 예방센터는 최초 에이즈 감염자들을 모두 동성애자들 중에서 찾아 냈다. 이런 노력은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대비되는 소극적인 대응, 더딘 치료제 개발, 턱없이 비싼 약값과 등을 감추려는 시도다.

에이즈가 “특별한 질병”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 에이즈의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데 이용된다. 지난 6월 10일 정부와 언론이 에이즈에 걸린 매춘 여성이 일부러 에이즈를 퍼뜨린 것처럼 비난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지원을 중단했다. 한 번에 20여만 원이 드는 이 검사가 보험 적용이 안 돼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는 단속 대상이지 보건소의 검진 대상이 아니”라며 매춘 여성을 억압하는 정부 방침이 에이즈 예방을 어렵게 만든다. 매춘 여성이 에이즈 확산을 낳는

게 아니다. 여성이 몸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난과 매춘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다.

죽음으로 내몰린 세계

지난 6월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한 세계 식량정상회의는 선진국 정부들이 에이즈를 퇴치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줬다. 빈곤과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 모인 이 회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스페인과 개척국인 이탈리아만 참석했다.

지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전체는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 3천6백만 명 중 70퍼센트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1천2백만 명의 아이들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다. 이 숫자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 6년 동안 유럽에서 생긴 고아 수와 비슷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의 15세 청소년 절반이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나 이들 중 단지 0.1퍼센트만이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사형수처럼 곧 맞이할 고통스런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2001년 3월 5일, 다국적 거대 제약 회사들 —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화이자, 메르크, 베캄, 엘릴리리, 베링거 인겔하임, 브리스톨 마이어스, 로슈 등 — 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소송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1997년부터 값싼 에이즈약을 생산해 왔다.

제약 회사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 특허권이 있는 약품 — 에이즈와 그 합병증을 치료할 모든 약 — 생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약 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인도 회사 시플라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냈다. 시플라는 인도 내에서 값싼(미국 약값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 가격)에 이즈 치료제를 생산해 왔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천식 치료제를 1달러에 판매하는 시플라가 같은 약을 27달러에 판매하는 거대 제약 회사들의 “정당한” 이윤을 갉아먹는 “해적”이라고 비난했다. 인도인 1인당 연간 보건 예산은 10달러다.

거대 제약 회사들은 소송에서 승리했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정부들은 더 이상 값싼 복제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됐다. 거대 제약 회사들은 아프리카와 미국 등지에서 커다란 비난을 받았고 압력에 밀려 몇 가지 약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하루 약값이 2만 원인 약이 2천 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 중 하루 수입이 1천 원 미만인 사람이 절반에 가까워, 약값 인하는 큰 도움이 못 된다. 서아프리카의 말리는 인구 1인당 1년 총 보건 예산이 5천 원도 안 된다.

국제적인 빈민 구호 단체인 옥스팜은 비싼 약값이 매년 1천1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다고 말했다. 그 중 절반은 어린 아이들이다.

에이즈의 원인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다. 그러나 에이즈는 빈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 치명적인 — ‘위력’을 발휘한다.

1991년 11월 HIV 감염으로 농구를 그만둔 매직 존슨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재’하다. 42세인 매직 존슨은 FBC 은행 최대 주주이자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랜타 등지에 극장과 쇼핑몰을 갖고 있다. 매직 존슨은 상당한 수준의 스타벅스 체인점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TGI 레스토랑도 몇 개 소유하고 있다. 매직 존슨은 힘없이 죽어 가는 아프리카인들과 달리 지금도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나 팔렸는지 점검하고 콕테일 재료가 떨어지면 금세 알아채 담당자를 심하게 꾸짖을 정도로 건강하다.

세계화의 그림자

거대 제약 회사들은 한 해 이윤이 수십 조 원이다. 세계 5대 제약 회사의 총 자산이 멕시코와 인도 경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또,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체 경제 규모보다 두 배나 크다. 1998년 한 해 미국 제약 회사들은 1백19조 원을 벌어들였다.

제약 회사는 이윤 중 단 0.2퍼센트만을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설사, 폐렴, 결핵 치료제 개발에 썼다. 반면, 1997~1998년에 미국제약협회는 로비를 목적으로 미국 의회에 2억 3천6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리고 1990년 한 해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에 로비 자금으로 1천4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제약 회사들은 WTO 지적 재산권 규약을 이용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 규약은 인간의 삶보다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을 보호한다. WTO 지적 재산권 규약은 앞으로 20년 간 거대 제약 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약을 생산해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 정부, 유럽 선진국 정부들, 일본 정부가 WTO의 이윤지상주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는 값싼 약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나라들에 무역 제재를 가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미국 정부는 제약 회사가 요구한 대로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포함한 30개 국에 무역 제재를 가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에이즈 위기를 확산한다.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하는 내핍 정책 때문에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한국의 보건 시설이 상당수 붕괴했다. 버마, 베트남, 중국에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IMF가 강요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부채 상황은 1990년대 내내 아프리카에서 7백억 파운드(약 126조 원)를 빨아먹었다. 이 돈의 일부만으로도 에이즈로 죽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거대 제약 회사와 서방 정부들이 벌이는 총성 없는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라! 부채를 탕감하라! 보건과 복지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라!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다

이정구

1987년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조합의 건설에서 시작한 대중파업은 거의 세 달 동안 전국을 파업 물결로 뒤덮었다.

7~9월 동안 3천3백11건, 하루 평균 30건 이상 파업이 발생했다. 이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쟁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였다. 그야말로 ‘십 년을 하루에 뛰어넘은’ 거대한 대중파업이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노조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60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겼다.

7월 한 달만 해도 2백70여 건의 파업이 벌어졌고 1백20여 개의 신규 노조가 만들어졌다. 8월 들어 파업은 울산과 남동해안 공업 지대에서 구미·대구·포항을 거쳐 강원도 광산 지역과 호남 지역, 그리고 중부의 경공업 지역을 휩쓸며 수도권으로 이어졌다. 파업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화학공업에서 경공업으로, 광공업에서 운수·부두·사무직·전문직·판매서비스직 등 전산업으로 파급됐다. 투쟁이 절정에 오른 8월에는 2천5백여 건의 파업이 벌어졌다.

대중파업 기간에 벌어진 쟁의 가운데 97퍼센트가 불법 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은 쟁의 발생 신고나 냉각 기간을 무시하고 일단 파업을 해서 힘을 과시한 뒤에야 협상에 임했다. 당시 전경련 전무가 “이번 노동쟁의는 노동관계법은 물론 기본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혁명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주적 단결에 기초한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어용노조를 민주화했다. 파업을 전개한 작업장 가운데 70퍼센트 이상이 노동조합 건설과 노조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노동자들은 “해고·강제 사표·부당한 부서 이동·차

별 대우 등에 대한 불만과 저 임금·장

시간 노동·작업 강도 강화·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과 민주노조 건설이 사활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파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8월 27일 “노총과 각급 상하조직을 고립화 내지 붕괴시키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전 조직력을 동원해 단호히 응징[하고] 필요한 경우 1천 명의 각목 부대를 동원”하겠다고 협박했다.

투쟁을 통해 건설된 노동조합들은 현장 조합원 대중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작업장에 기초한 대표들을 직접 선출하고 통제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농성장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제도를 바꾸고 어용 집행부를 교체했다.

6월항쟁의 성과를 논하다

1987년 6월항쟁은 4·19, 부마항쟁, 5·18과는 달리 결정적인 반전을 겪지 않았다. 뒤이은 7~9월 대중파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6월항쟁으로 한 발 물러선 군부독재는 위력적인 7~9월 대중파업에 깜짝 놀랐다.

전두환 정권은 노동자 투쟁을 선불리 건드렸다가 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7월 10일 노동부장관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은 계속 육성,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며 경영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투쟁이 절정에 올라 정치적 성격을 띠 조짐을 보이던 8월 20일 ‘중앙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탄압을 준비했다. 8월 21일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는 ‘좌경적결3대방안’을 발표하고 “위장취업자와 외부세력 개입을 색출”하겠다고 발표했다.

8월 22일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엿새 뒤 경찰은 열사의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시신을 탈취했다. 그리고 전국에서 벌어진 추모 집회를 공격해 9백33명을 연행했다.

아직 경험이 일천하고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노동

자 운동은 정권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8월 28일을 기점으로 노동자 투쟁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8월 28일까지 하루 1백 건 이상을 기록했던 쟁의는 8월 29일 이후 50건 내외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나름의 '선거혁명론'을 내세우며 선거를 통해 군부독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선거주의도 투쟁의 전진을 막은 장애물이었다. 야당에 정치를 의존하고 있던 국민운동본부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혁명과 민선민간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다.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도 김대중이 주장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선거와 야당에 의존하고 있던 국민운동본부와 서대협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투쟁을 확대하거나 정부의 공격에 반대해 투쟁을 조직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6월항쟁과 7~9월 대중파업을 통해 급속히 성장한 노동계급의 진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1987년 11월 노동법이 개정돼 7~9월 대중파업으로 탄생한 민주노조가 공식 인정됐다. 남한 노동자 운동이 거대한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교훈

1987년 7~9월 대중파업의 씨앗은 6월항쟁이었다. 6월항쟁이 전개되면서 갈수록 노동자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6월항쟁은 부분적으로 노동자 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얻은 자신감을 작업장으로 가지고 갔다.

다른 한편, 7~9월 대중파업은 6월항쟁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내걸고 싸운 투쟁이었다. 부르주아 야당은 궁극적으로 사장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래서 6월항쟁에서 군부독재에 반대한 부르주아 야당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들에게 투쟁 자체를 호소했다.

중간계급 사람들이 간부들인 국민운동본부는 선거주의와 민중주의 정치에 기반했기 때문에 노동자 투쟁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고유한 요구를 민주주의 요구로 뭉뚱그리게 되면 노동자 계급과 다른 계급의 차이를 못 보게 된다. 군부독재에 맞서 일관되게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노동계급임을 이해할 수 없다.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대부분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 경제 투쟁이었다. 한 공장의 투쟁은 금세 공장의 담을 넘어 지역 연대로 발전했다. 그 결과 현대그룹노동조합의 회 같은 노조 연합 조직이 등장했다. 그 이후에는 지역 노동조합들과 전국 조직이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하고 시청과 관공서를 공격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은 국가의 개입과 탄압 때문에 쉽게 정치 투쟁으로 발전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흔히 국가와 대결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1987년 7~9월 대중파업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파업》에서 주장한 것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다.

정치 투쟁은 경제 투쟁에 강한 자극을 주고 경제 투쟁을 위한 기름진 퇴적물을 남겼다. 투쟁의 선두에 선 부분은 뒤져 있는 부분에게 자극을 주고 뒤져 있던 부분이 다시 전면에서 나서 거대한 투쟁으로 어우러지는 '선진과 후진의 변증법'이 펼쳐졌다.

7~9월 대중파업은 노동조합이 투쟁 속에서 건설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현장 조합원 대중에 기반할 때 노동조합이 더욱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편견을 깨뜨린 과학자

폴 먹가*

지난 5월 20일에 죽은 스티븐 제이 굴드는 여러 모로 우리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이었고, 특히 자연의 역사와 진화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다. 그는 또한 평생 동안 인종 차별 사상과 온갖 종류의 반동적인 사상에 맞서 싸운 투사였다.

20년 동안 암과 투병한 그는 60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암 투병 기간 내내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저술 활동을 했다. 197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는 미국 잡지 《내추럴 히스토리》에 매달 칼럼을 연재했다. 3백편이 넘는 이 에세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아져 책으로 발간되었다.

진화나 진화를 둘러싼 논쟁들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굴드의 글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요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과학 외에도 역사, 예술, 문화,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야구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넘나든다. 그는 과학적 풍부함이라는 미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대중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과학자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글이 전문가들뿐 아니라 보통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이해되기를 바란다.” 나는 《건초더미 속의 공룡》이라는 글 모음집을 가장 좋아한다. 이 책에는 반동적인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메리 셸리의 유명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왜곡하는 것을 논박하는 빼어난 에세이들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반제 의정서》에 대한 소름끼치지만 유용한 에세이들 또한 담겨 있다. 《반제 의정서》는 나찌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인종적·유전적 뉘센스인 히틀러의 “궁극적 해결책” [홀러코스트, 즉 유대인 말살 정책을 가리키는 나찌의 완곡어법 - 율킨이]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문서였다.

굴드는 창조론자들에 맞서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하기 위해 평생 동안 투쟁해 왔다. 그의 사상은 사망 직전에 출판된 《진화 이론의 구조》라는 방대한 책 속에 요약되어 있다. 아마도 그의 주장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단속 평형설”이다.

이 이론의 골자는 진화가 그냥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생물의 역사에서 더 급속한 진화의 시기가 오랜 안정기를 중단시켰다는 설을 제시했다.

그의 견해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논쟁은 적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나겠지만, 나는 많은 핵심적인 문제들에서 굴드가 옳았음이 입증되리라 생각한다.

굴드의 자유주의적 견해는 모든 저작에서 드러난다. 굴드에

게 화가 난 우익들은 때때로 그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때때로 그는 자기의 핵심 주장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쓴 어떤 책에서 종교에 대해 불필요한 양보를 하기도 했다.

그는 너무 자주 우연을 과장했다. 그래서 진화와 역사에서 모든 패턴을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1년에 쓴 《인간에 대한 잘못된 척도 The Mismeasure of Man》은 사회주의자, 인종 차별 반대론자, 그리고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이 책은 과학이 인종 차별과 여성 차별 그리고 계급 분단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비판한다.

굴드는 19세기의 주류 과학자들이 어떻게 흑인이 백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된 “증거”는 두뇌와 두개골의 크기였다. 굴드는 이들 과학자들의 편견이 자신들의 작업에 조잡하고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탁월하게 보여 주고 있다.

20세기에 아이큐 테스트는 두개골 크기 측정의 뒤를 이어 흑인과 여성의 ‘열등함’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특히 나찌와 영미의 우익으로부터 - 율킨이] 각광받았다. 굴드는 이번에도 이러한 사상을 무력화시킨다. 그는 또한 아이큐 검사와 “지능”이라고 부르는 단일하고 측정가능한 양에 대한 논의를 그 뿌리부터 비판한다. [진정한 지적 능력은 다면적·복합적이어서 ‘아이큐’ 같은 수량으로 나타낼 수 없고 아이큐 테스트는 사이비 과학이라는 뜻 - 율킨이]

그는 우리가 유전자의 포로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 싸우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구실을 했다. 

스티븐 제이 굴드 저서 소개

《판다의 엄지》(세종서적, 1998년)

《클론 앤 클론》(공저, 그린비, 1999년)

《풀 하우스》(사이언스북스, 2002년)

《다윈 이후》(범양사 출판부, 1988년)

* 폴 먹가(Paul McGar)는 물리학자 출신의 영국 좌파 저널리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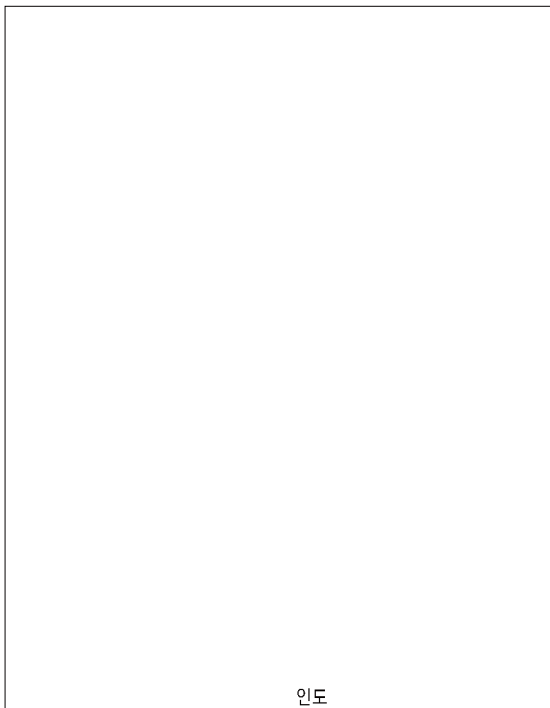


스티븐 제이 굴드



인도-파키스탄 충돌과 핵 악몽

이수현



인도



파키스탄 군사 독재자 무사라프

6월 13일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잇따라 방문한 뒤 “양국 지도자들이 핵 보유국 책임에 걸맞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핵 대결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럼즈펠드가 그 말을 한 다음 날인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다시 포격전이 벌어졌다. 적어도 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 카슈미르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카슈미르를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나누는 ‘통제선’에 1백만 명이 넘는 양국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래식 제한전조차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핵전쟁이 벌어지면 9백만~1천2백만 명이 즉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 국방장관은 “파키스탄이 핵전쟁을 시작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보복할 것이고 두 나라 모두 멸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군 장성들도 대통령

무사라프에게 한치도 물려서지 말라고 요구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충실히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작년 12월 인도 국회 의사당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인도 총리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흉내냈다. 그는 파키스탄을 테러 국가로 지목하고 파키스탄과 벌일 전쟁을 정당화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이슬람주의 게릴라들이 인도 군 기지를 공격해 3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파키스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바지파이는 이참에 전쟁을 해서 카슈미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 바지파이는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을 본떠 파키스탄의 모든 양보 조치를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했다. 금년 말에 치를 선거 전에 카슈미르에 있는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9·11 사태 뒤 한층 가까워진 파키스탄과 미국의 관계를 다시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한다.

한편, 3년 전에 쿠데타로 집권한 파키스탄 대통령 무사

라프는 인도에 양보하다가 군부의 반발을 사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한다.

무사라프는 9·11 뒤 미국편에 붙어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거들었다. 작년 12월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자 파키스탄 군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파키스탄 군부는 이슬람주의 전사들을 카슈미르로 보냈다. 그 전에도 파키스탄 군부는 카슈미르에 있는 이슬람주의 조직들과 다양한 연계를 맺고 있었다. 카슈미르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인도 국방장관이 “공멸”을 언급한 바로 그 날, 조지 W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11 뒤에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1월 영국 관리들은 인도·파키스탄과 무기 수출 협상을 벌였다. 지금도 인도에 호크 전투기 66대를 공급하는 10억 파운드(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거래를 성사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인

도와 파키스탄을 ‘중재’한 러시아의 푸틴은 인도의 “차세대 무기 개발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전쟁 물이는 과거에 세 번이나 전쟁을 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한복판에는 카슈미르 문제가 있다.

1947년 영국 지배에서 독립한 인도는 배신과 협박을 일삼으며 무슬림이 대다수인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차지했다. 인도는 카슈미르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철권 통치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패배한 인도는 중국이 인도를 침공하는 길목이 될 카슈미르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인도의 강권 통치 때문에 카슈미르에서 지난 10년 동안에만 약 8만 명이 죽었다. 죽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슬림이었다.

한편, 국가의 존립 근거를 무슬림 보호에서 찾는 파키스탄도 잠무 카슈미르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잔혹한 탄압 통치에 시달리는 무슬림들의 해방을 카슈미르 병합 구실로 이용한다.

그러나 지금 파키스탄이 통치하는 아자드 카슈미르는 완전히 비민주적 인 사회다. 아자드 카슈미르는 카슈미르 사람들이 아니라 파키스탄 중앙 정부가 임명한 자들이 통치한다. 그래서 1989년 카슈미르에서 인도 지배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일부 카슈미르 사람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슈미르에 있는 친파키스탄 이슬람주의 게릴라들은 1993년 8월 버스 승객 16명을 총살해 고립을 자초했다. 1989년 이래로 평범한 카슈미르 사람들은 친파키스탄 게릴라 전사들의 총이든 인도 보안군의 총이든, 총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카슈미르 민중에게 유일한 진보적인 대안은 힌두교도와 무슬림, 인도 국민과 파키스탄 국민 사이의 우애와 단결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지배 계급 중 한 편을 지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연 표

1846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카슈미르 지배권을 인도의 토후에게 판매.

1947년 8월 영국의 인도 지배 종식.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힌두·무슬림 유혈 분쟁으로 약 1백만 명 사망.

1947년 10월 제1차 인·파 전쟁 발발. 카슈미르 분할, 인도가 3분의 2 차지.

1962년 10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 인도 패배. 중국, 카슈미르 일부 지역 점령 지배.

1965년 9월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침공. 제2차 인·파 전쟁.

1971년 12월 제3차 인·파 전쟁.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

1974년 5월 인도의 첫번째 핵실험.

1979년 12월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미국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훈련·양성.

1989년 7월 소련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카슈미르에서 인도 지배에 반대하는 봉기 발생.

1998년 5월 인도, 다섯 차례 핵실험. 파키스탄 여섯 차례 핵실험.

1999년 6월 인·파 긴장 재발로 전면전 위기.

1999년 10월 무사라프, 군사 쿠데타로 집권.

2001년 9월 9·11 테러 사태 발생.

2001년 10월 미국, 아프가니스탄 공습.

2001년 12월 탈레반 항복. 인도의 사담 테러 사태 발생.



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은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승영

라엘은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정착촌 건설을 확대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정착민은 갑절로 늘어났다. 토지 강탈도 계속됐다. 고속도로 건설을 핑계로 불법으로 영토를 병합하기도 했다.

정착촌은 일종의 소규모 요새다. 정착민들 대다수는 이스라엘의 식민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이다. 정착촌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이 설령 두 국가 방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서로 떨어져 있다. 이스라엘이 국경을 폐쇄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왕래할 길이 없다. 이스라엘은 일 년에 수십 일씩 국경을 폐쇄했다.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가자 지구에는 비옥한 토지가 없고 물도 부족하다. 가자 시 우물의 질산 농도는 미국 기준치의 11배가 넘는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 지역 절반에 하수 시설이 없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난민 귀환 문제다.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1948년에 자기 고

향을 떠났다. 자손들은 아직도 레바논 등지의 난민촌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

‘두 국가 방안’은 국제법에서 보장한 난민 귀환 권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오늘날 중동 평화의 진정한 걸림돌은 이스라엘과 이를 후원

중동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있다. 절망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폭탄 테러를 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핑계로 또다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한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흔히 ‘두 국가 방안’을 대안이라고 얘기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치 지구인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이 나머지 지역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의 기본이 되고 있다. 1993년의 오슬로 협정도 이 안을 기초로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중동 평화안’도 ‘두 국가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은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 줬다. 지난 5월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리쿠드당 중앙위원회는 서안과 가자에 어떤 팔레스타인 국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모든 팔레스타인 단체들을 제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치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몰아내려 한다.

1990년대에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스

하는 미국이다.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한편,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리고 중동 석유와 패권을 노리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팽창 노력을 지원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려면 팔레스타인 땅에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해 그 안에

서 유대인, 아랍인, 기독교인 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식민화 정책을 포기한다고 가정하는 두 국가 방안이야말로 비현실적이다.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 전략을 그대로 둔 채 중동 평화와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

반란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아르헨티나

이정구

아르헨티나 대통령 에두아르도 두알데가 집권 7개월 만에 위기에 처했다.

두알데는 비상경 제대책안 14개 항을 내놓았지만 경제 공황은 해결되지 않았다. 두알데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것뿐”이라고 토로했다.

두알데는 지배자들 내에서 술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임 경제장관이 국가 재정 파탄과 금융 체계 마비를 막기 위해 은행 예금을 5~10년 만기 공채로 대신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제시했다. 의회에서 이 안을 부결했다. 이 때문에 호르헤 레니코브 경제장관이 사퇴했다.

두알데는 예금 동결과 일시적인 모라토리엄(외채 상황 무기 연기)을 선언했지만, 연방법원은 예금 동결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기업과 연계된 메뎀이 1990년대에 충원한 자들이다.

처음에 두알데가 시장 규제적 조치들을 일부 취하자 아르헨티나 대자본들이 신성동맹을 맺고 두알데 흔들기에 나섰다. 자본가들의 반격에 손을 든 두알데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결국 은행 예금 동결과 폐소화 평가 절하는 중간 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큰 타격을 주었다.

아르헨티나 지배계급 내 어느 분파도 현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배계급 내에서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달러화에 연동된 폐소화의 평가절하가 한 예다. 금융 자본가들은 폐소화 평가 절하를 반대했지만 산업 자본가들은 국제 경쟁에서 가격 우위를 위해 폐소화 평가절하에 찬성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를 조장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긴급 융자 90억 달러(약 11조 원) 제공을 거부했다. IMF는 더욱 철저한 긴축 재정을

강요하고 있다.

약점

경제 공황과 정치 불안정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거의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격렬한 시위는 남부 추부트, 북부 산타페, 북서부 투쿠만, 수도 부근 멘도사 등 주요 도시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거리 곳곳에서 냄비를 두들기며 거리 행진을 하는 시위와 주로 실업자들로 이뤄진 피케테로스 시위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식량과 일자리를 요구하고 예금 동결에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작업장과는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넴비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부패와 외국 자본의 사악함에 분노를 집중하고 있다.

넴비 투쟁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대중 의회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계급 구성이 다양하다. 투쟁의 성격도 모순적이다. 이들은 국기를 흔들며 국가를 즐겨 부를 정도로 민족주의적이다.

나날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정부는 중간계급 일부를 이 운동에 끌어들이며 빈민과 실업자 운동에 몰타기를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두 노총도 취업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특징은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이 페론주의 정당에 종속돼 왔던 역사를 반영한다.

매우 높은 실업률, 소기업과 중간계급의 파산, 빈곤이 낳은 원자화와 고립감이 한편으로는 빈민과 실업자 투쟁을 낳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계급 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경제 공황에 환멸을 느낀 일부 사람들은 일부 선거에서 극우파를 지지하거나, 칠레나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출신 이민자들을 비난한다. 최근 여론 조사는 이런 인종 차별이 지난 10년 이래 급속도로 자라고 있음을 보여 줬다.

투쟁의 분출은 절망감에서 나오는 이런 인종 차별이 민족주의의 테마고기를 잠재우고 있다. 의미있게도, 지역 대중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이민자들에 대한 연대를 표시한다.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투쟁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인종주의나 극우 민족주의가 득세할 수 있다.

과제

아르헨티나 좌파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대중의회에서 제기되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일반화하는 것이다. 임금

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 민중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지 정책, 은행의 국유화, 사유화된 기업의 재국유화, 민중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 관련 기업과 슈퍼마켓의 식료품 통제하기 등.

둘째, 이러한 요구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위의 요구를 시행하려면 여전히 투쟁 회피적 노조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취업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실업률이 높아져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그 수는 여전히 많다. 특히, 이들은 지금의 아르헨티나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기기 힘든 싸움에 뛰어들기를 꺼릴 수 있다. 또,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까 봐 두알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득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대중 행동이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나날이 벌어지는 투쟁에 조직적으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연루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피케테로스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다른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에 저항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을 통해 전에는 이루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요구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작년 말부터 시작한 아르헨티나의 격변은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하루가 다르게 바꿔 놓고 있다. 

생명인가 이윤인가

이의철(인하대 의대)

글리벡은 작년 5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승인한 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인구 10만 명당 1명이 걸리는 희귀질환으로 우리 나라에는 5백여 명의 환자가 있다.

지금까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는 질병의 진전을 막을 뿐인 인터페론 치료와 성공률이 낮은 골수이식밖에 없다. 생존율이 25퍼센트에 불과했다. 작년 11월 미국 혈액학회 실험에서 글리벡은 백혈병 원인 유전자 77퍼센트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냈다. 이런 이유로 글리벡은 백혈병을 완치하는 '기적의 신약'이라 불린다.

글리벡을 개발한 스위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국내 글리벡 가격으로 한알에 2만 5천 원을 요구했다. 하루에 4~6알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 달 약값으로 3백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입원 환자는 60만 원, 외래 환자는 90만 원 이상 약값을 내야 한다. 환자들은 약값 말고도 기본적 치료 비용으로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더구나 전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초기(만성기) 환자들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한 달 약값 3백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환자들의 더 큰 비극은 이 약을 3~5년이나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백혈병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먹을 엄두도 못 낸다. 더구나 노바티스는 한국 정부가 고시한 1만 7천 원을 거부하고 있어 9개월째 글리벡의 정상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공급 교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동일 가격으로 한달에

최소 2천4백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은 경제 규모가 작고 소득이 낮은 국가에 더욱 큰 부담이 된다.

실제 우리 나라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국민보건서비스(NHS) 제도를 시행중인 영국에선 낮은 본인부담률 덕분에 환자들이 우리 나라의 5.8퍼센트 정도만 부담해도 글리벡을 먹을 수 있다.

게다가 세계 동일 가격은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 미국의 글리벡 가격은 2만 1천 원이고, 영국은 2만 3천 원, 브라질은 1만 7천 원 수준이다.

한 제약회사는 글리벡 생산 원가가 8백 45원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 요구 가격인 2만 5천 원은 원가의 30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지적재산권이 보장하는 독점권을 이용한 횡포다.

지적재산권이 보장하는 독점 덕분에 노바티스는 글리벡 시판 8개월만에 투자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지난 1분기 글리벡 매출액은 1억 1천1백만 달러(1천4백18억 원)였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제2차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정부 고시가(1만 7890 원)를 어기는 노바티스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저 6개월 더 기다려 보겠다고만 밝혔다.

환자들과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글리벡공대위)'가 계속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노바티스는 약값을 겨우 1천 원 내렸다.

환자들이 비싼 약값으로 고통받는 것이 노바티스의 탐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과목이 적고 본인부담률도 높아 환자들의 경제 부담이 매우 크다.

작년 11월 정부는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글리벡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초기(만성기) 환자들은 보험 혜택에서 제외했다. 초기 환자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약 반응도 좋아 완치율이 높다. 그렇지만 초기 환자가 중기(가속기), 말기(급성기)로 갈수록 약 반응성이 떨어져 2~6개월 내에 사망하게 된다. 정부는 약으로 완치할 수 있을 때는 약을 못 쓰게 하고는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야 글리벡 사용을 허가한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탐욕을 보장하는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보면 세계 무역 체제의 비인간성과 자본주의(이윤 지상주의)의 적나라한 논리를 알 수 있다. 제약회사의 탐욕에 대한 반감은 체제 논리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 이어진다.

글리벡 가격 인화와 보험 적용 확대, 글리벡 강제 실시 허용 등을 요구하는 환들과 글리벡 공대위의 활동은 '반이윤 지상주의' 운동의 일부다.

6월 15일에 '한국만성백혈병 환우회'가 창립했다. 환우회는 그 동안 글리벡 투쟁을 벌여온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환우회는 창립 성언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누구든 빈부에 의해 지위에 의해 질병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또 차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난 두렵지 않아요



프란체스코 다다모
중앙M&B

이크발은 집
이 가난해
서 카펫 짜는 공장
에 팔려왔다. 그 곳

어린이들은 자기처럼 빛을 갠기 위해 팔려온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15시간 가까이 일한다. 일을 잘 못 하면 벌로 쇠사슬을 감은 채 일해야 한다.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마음놓고 씻지도 못 한다.

잘못이라도 저지를 땀 ‘무덤’에 갇힌다. 무덤은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물탱크다. 물탱크 안에는 물뱀이나 전갈 같은 무서운 동물들도 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은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다. 5~12세 어린이들에게는 죽음보다도 고통스런 벌이다.

카펫 공장에는 커다란 칠판이 있다. 아이들의 빛을 기록해 놓은 칠판이다. 이크발이 칠판에 적힌 빛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자 아이들은 울먹인다.

카펫 공장에는 금지된 말이 있다. “내년 여름”이나 “3년 뒤”, 혹은 “내가 커서”라는 말이다. 그 곳 아이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크발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변호사가 돼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결국 이크발은 한번의 실패 끝에 탈출에 성공한다. 탈출한 소년은 ‘미성년자 노동 해방전선’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그리고 카펫 공장의 친구들도 함께 자유의 몸이 됐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다. 이크발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크발은 그 곳에 남아서 활동하겠다고 말한다. 다른 활동가들이 이크발이 너무 어리다고 말하자 이크발은 단호하게 말한다. “난 두렵지 않아요.”

이제 이크발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노동운동가다. 몸에 비해 확성 나팔이 아주 무거워 보이지만, 아동 노동자의 권리를 외

치는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결연하다.

이크발은 날마다 사장들이 고용한 마피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한다. 언론은 어린이의 순수함을 이용한 부끄러운 짓이라며 이크발을 매도했다. 뇌물을 받은 경찰들도 소년의 편이 아니었다.

그렇수록 이크발의 목소리는 커졌다. 이크발은 세계에 알려졌고, ‘행동하는 젊은이상’을 받는다. 스웨덴에서 열린 노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회의에도 참여했다. 이크발은 회의에 참여해 이렇게 말했다.

“파키스탄에는 7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캄캄한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어린이들은 밤까지 일합니다. 아이들은 노예입니다.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채 매를 맞고 학대받는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나 비열하고 무자비한 자본가들은 이크발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결국 어린 노동 운동가는 그 상을 받고 얼마 뒤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1995년, 그의 나이 13세였다.

이크발은 비록 죽었지만, 아크발이 남긴 감명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이크발은 2000년 ‘세계 어린이 상’의 첫 수상자가 됐다.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골에 열광할 때 한 인도 소녀가 가슴 아픈 사연을 말하러 한국에 왔다. 그 소녀는 5살 때부터 축구공을 만든다 7살 때 시력을 잃었다. 인도 어린이 2만 명과 그보다 훨씬 많은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만든다고 그 소녀는 고백했다. 12시간 넘게 고된 노동을 하고 받는 돈은 겨우 3백 원 정도다. 시력을 잃은 인도 소녀는 “변호사가 돼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크발은 죽었지만, 아동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가족적 환경, 행복, 사랑,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지금 3억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하루 12시간 이 넘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 책은 아동 노동 현실에 용감하게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아름다운 소년’ 이크발에 대한 이야기다.

승영

진화의 패턴

로저 르윈
사이언스북스인류가 봉건
제 사회에

서 자본주의 사회로

도약하던 몇 세기 전, 단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기존 관념들이 새로 등장한 혁명적 사상들과 충돌했다.

특히, 과학의 발전 덕분에 기독교적인 지배 관념을 송두리째 뒤엎는 이론들이 생겨났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의 생명 창조를 부정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다.

진화론이 세상에 발표된 지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는 아주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을 달에 보내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일식 같은 사건들을 예보할 수 있다. 또 지구와 우주의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제일의 선진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사람들의 55퍼센트 가량은 인간이 원숭이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가 발표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캔자스주 교육위원회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

로저 르윈은 《진화의 패턴》에서 명쾌한 이론이었지만 창조론자들의 독기어린 비판에 모든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진화론이 《종의 기원》 이후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 인류학, 계통학, 비교해부학, 가장 최근에 대열에 합류한 분자생물학 등 진화의 패턴을 밝히려는 학문이 어떻게 분화·발전·통합하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진화론에 대한 오해나 미래의 부풀려진 환상을 지적한다.

진화론을 비판하는 창조론자들이 흔히 제기하는 문제 중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는 ‘잃어버린 고리’에 관한 것이다.

종과 종 사이에는 커다란 형태 차이가 있는데도 현대의 종 사이의 고리, 즉 중간 단계의 생명체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단계, 모든 고리를 찾아내야 진화론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진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데 과학자들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30년 전까지는 그랬다.

1975년 킹과 윌슨은 새로 도입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은 결과와 기존의 형태학적 분류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생물체의 유전자는 끊임없이 진

화하지만 생물체 전체의 구조를 조절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훨씬 극적인 형태 변화가 — 종종 폭발적으로 — 일어난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전자와 형태학적인 진화는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고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연 선택’ 이론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창조론자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심지어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이 이론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와 불충분한 과학 기술 때문에 종종 함정에 빠지곤 했다.

진화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나는 즉시 ‘좋은 것’으로 선택돼 다수의 종을 이루거나, ‘나쁜 것’으로 선택돼 제거된다면 진화의 동력은 ‘선택’ 자체이고 이는 초자연적인 ‘의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실험들은 그런 변화의 기원이 선택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진행됨을 밝혀냈다. 리처드 르윈틴을 비롯한 유전학자들은 초파리, 옥수수, 실험용 생쥐 등을 이용해 모든 개체의 단백질이 각 개체당 평균 30퍼센트 정도에서 하나 이상의 변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기원이 되는 유전자의 10퍼센트 정도가 다형현상(원래의 유전자에서 부분적인 변이를 일으킨 유전자)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진화의 시작, 즉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해

부적 특성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의해 선택이 일어나기까지 상당 기간 축적된다. 그리고 선택은 자연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종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연계 역시 그 모든 종들의 종합물이고 종들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분자생물학 연구는 최근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밝

혀냈다.

인류는 10만 년 전 지금의 아프리카에서 살던 한 집단에서 기원했다.

유인원과 구별되는 인간이 지구에 등장한 5백만 년 전부터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원시 인류의 다른 집단은 모두 멸종되고 비교적 최근에 단일한 집단이 세계에 퍼져 살게 되었다. 이는 언어역사학 연구 결과에 의해 그 타당성이 입증됐다.

마지막으로 ‘쥐라기 공원’은 현재의 화학, 물리학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 불가능함이 증명됐다. 너무 심하게 부패한 고

기는 맛을 느낄수 없는 것처럼 엄청난 시간이 지나 분해돼 버린 유전자를 원래의 생명체가 갖고 있던 유전자로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저 트윈은 우리가 개구리든 공룡이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것은 전체 과정에서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 넘어야 할 장벽이 유전학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전문 생물학 용어들이 많아 읽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책에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풍부한 역사적 사례들과 수십 년에 걸친 실험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나 리처드 트윈틴같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안진형

경제학의 역사



J.K 갈브레이스
책벌레

경제학이 어려운 용어들과 수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만 여기며 고개를 절레절레 젖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말한다. 경제학은 “자유재산 제도와 부의 추구에 결부돼 있는 권력과 인간의 동기와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다. 갈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세계를 반영하는” 작업이다.

갈브레이스는 이것을 《경제학의 역사》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애덤 스미스의 학설은 산업혁명 초기의 충격 속에서, 데이비드 리카도의 학설은 산업혁명이 더 성숙해진 단계에서, 마르크스의 학설은 자본가 권력에 의한 압박의 시대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학설은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재앙에 대한 반응으로서 각각 발전해 나온

것”이다.

갈브레이스는 야심 차게도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경제학부터 더듬어 간다. 당연히게도 당시 경제학은 농업을 찬미했다. 노예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다.”(플리니, 23년경~79년) 이런 견해는 노예 노동에 의존하는 사회의 비효율성을 반영한다. 기독교와 경제학의 관계를 설명한 제3장의 내용도 흥미진진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는 가격, 임금, 이자, 이윤이 어떻게 결정되는냐는 문제에 집중됐다. 19세기 당시에는, 이윤이 절제의 대가라든지, 기술 혁신과 위험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보수라는 주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갈브레이스는 위와 같은 주장이야말로 설득력이 없었던 19세기 경제학의 최대 약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뭘니뭘니 해도 근대 경제학은 《국부론》의 등장과 관련있다.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윤의 원천은 무엇인가? 무엇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가?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진정한 척도다.” 만약 노동의 양과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면? 그리 되면 이윤을 자본가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스스로 던진 이 민감한 물음에 애매하고 모순되게 답했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데이비드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가 남긴 공백을 메우려 했다. 리카도의 말처럼 이윤은 “과거 노동에 대한 연불”이다. 리카도는 모든 기계나 설비는 낱자 붙은 노동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봤다. 리카도는 꽤 분명하게 자본가에 대한 보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한 것임을 증명했다. 지주의 불로 소득에 반대해 산업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했던 주식 브로커 리카도가 노동자 반란에 불을 당기는 데 기여한 셈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예리하고 통쾌한 비판으로 가득하다. 저자는 고전과 체계의 중요한 특징을 “불황 이론의 결여”라고 말한다. 고전과 체계는 “[불황의] 기원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세이 법칙은 고전과 경제학의 불문율이다. 사는 사람이 없어 물건이 창고에 쌓이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세이는 말한다. “공급은 항상 수요를 낳기 때문에, 수요 부족은 있을 수 없다.” 만일 신고전파 이론대로 불황이 이론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불황에 대한 치유책도 있을 수 없다.

갈브레이스는 케인스의 《일반이론》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도 대공황에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고전과 이론이 미국에 도입되는 과정도 꼬집고 있다. 저자는 경제학의 한 조류가 지배계급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이론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적 다윈주의는 고전과 경제학이 자연스럽게 미국에 정착하게끔 하는 윤택한 역할을 했다. “부자란 다원적인 과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선택된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스펜서는 금전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한테서 모든 죄책감을 해방시켰고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과 관심을 모두 제거했다.” 그러나 20세기가 지나면서 이 이론은 지배자들 내에서도 금세 인기를 잃었다. 자본가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너무 “품위 없어” 보인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갈브레이스는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서 허버트 스펜서의 목소리를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생애와 이론이 친절하고도 재미있게 소개돼 있다.

그리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 가면서 더듬어 봐야 할 부분도 많다. 용어, 개념, 인물을 꼼꼼하게 노트 정리하면서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체취를 느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여진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녹색평론

2002년 9월
요하네스부르크

그에서 세계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WSSD)이 열린다. 리우 선언 뒤 지난 10년 동안 온실 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퍼센트 이상 늘었다. 1990년대 초반 수십 개에 지나지 않던 자유무역협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자 무려 162개로 늘었다.

전쟁 위협과 군사적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면서 인간 사회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매일 5천5백 명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과 음식 때문에 병에 걸려 죽어간다. 아프가니스탄, 버마, 시에라리온 등 세계 30개 국가에서 30만 명 가량의 18살 소년이 전쟁에 병사로 동원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5살 이하 어린이의 영양실조율은 1990년 보다 증가했다. 유엔은 부자 나라의 빈곤국 지원 목표를 국민총생산의 0.7퍼센트로 설정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총생산의 0.2퍼센트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최고 부자 나라인 미국은 고작 0.1퍼센트 지원한다.

《허울뿐인 세계》로 우리에게 친숙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오래된 미래》에서 라다크를 통해 시장이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보여 준다. 1974년에 인도 정부가 라다크 지역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 그 곳은 서서히 변했다. 서구식 개발의 물살이 밀려 오면서 라다크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세계관도 변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농촌 지역에 있는 수백만의 젊은 이들은 현대 서구 문화를 자국 문화보다 훨씬 우월하게 본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걸만 보면 현대 세계의 물질적인면, 즉 서구 문화의 뛰어난 면만이 보일 뿐이다. 그 젊은이들은 산업사회가 달고 다니는 스트레스와 환경 파괴, 인플레이션, 실업 등을 보지 못했다.

한편, 라다크 마을 주민들은 자기들 문화가 한계가 많고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 문화를 유지한 마을 사람들은 돈 없이도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했다. 주민들은 1만2천 피트 고도에서 보리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더 높은 곳에서는 야크나 다른 짐승들을 키운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가까운 주변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직접 집도 짓는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그들 각자의 책임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라다크가 서구식으로 개발되자 주민들은 국제적인 현금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라다크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받았다. 라다크에서 2천년 동안 보리 1킬로그램은 그냥 보리 1킬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됐다. 곡물 시장이 요동침에 따라 내일 보리 값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끔찍해요”라고 라다크 친구들은 말한다. “모두 너 무나 탐욕스러워져 가요. 전에는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뿐이에요.”

1970년대 라다크의 여러 마을에 서구식 교육이 도입됐다. 오늘날에는 약 2백여 개의 학교가 있다. 기본 교과 과정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설픔게 훑내낸 것이고, 영국 교육을 어설픔게 모방한 것이다. 거기서 라다크 고유의 것을 찾기는 힘들다.

한 번은 저자가 ‘레’라는 동네의 한 교실에 가 보았는데, 교과서에 린던이나 뉴욕 아이들이 갖고 있을 만한 침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에는 깔끔하게 접은 손수건 무더기가 기둥 달린 침대 위에 놓여 있고 그것을 화려한 옷장의 어느 서랍에 넣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기울어진 피사탑과 땅이 이루는 투사각을 계산하는 문제가 속세로 나온 적도 있었다. 저자는 학생들이 《일리아드》를 영어로 번역하느라 고생하는 모습도 보았다. 한마디로 서구의 교육 체계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빈곤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유입으로 사회는 여러 면에서 분열한다.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불교도와 무슬림 사이에 간격이 생겨났다. 가장 큰 분열 요소는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이다. 남자들은 집 밖의 기술 중심 생활의 일부가 되고, 사회의 유일한 생산 구성원으로 여겨진다. 서구 핵가족이 이체는 규범이 되자 라다크 사람들은 전통적인 일처다부의 관행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와 풍요를 의심해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산업 사회 이전의 전통사회로 복귀하지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다크 현지 재료를 이용해 트롬브(trambe)벽이라는 난방용 태양열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현대의 발전된 기술과 과학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산업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 지상주의 논리다.

대안이 미흡하지만 이 책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라다크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인 단편을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조상운



13호(2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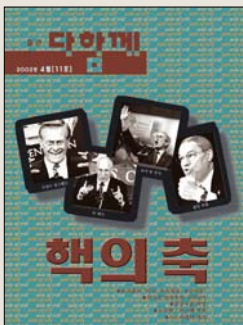
- 전지윤 옥중 인터뷰
- 홍근수 목사 인터뷰
- 반파시즘 투쟁
- 트로츠키는 누구였는가
- 5·3 동의대 사건 민주화 운동 인정
- 전교조 민주화 운동 인정
- 6월 항쟁 15주년
- 노무현과 좌파
- '노무현 현상' 토론회를 다녀와서
- 김대중과 노무현의 부패관
- 정치인들이 부패한 까닭
-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 월드컵 제대로 보기
- [운동안의 논쟁]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 네덜란드-죽은 당수가 부활했다?
- 중동을 휩쓰는 저항 물결
-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고이즈미



12호(2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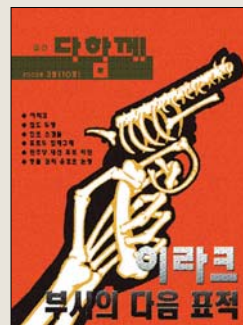
- 노무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
- 박근혜 지지가 진보인가?
- 불법체류방지 종합 대책을 철저히하라
- 유엔개발원국제회의
-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
- 발전 파업의 교훈

- 공교육 내실화 방안 비판
- 진중권 비판
- 에이즈
- 전쟁과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
- 베네수엘라
- 이탈리아 총파업
- 중국 노동자 투쟁
- 프랑스 대선
- [문화 비평] 할리우드 전투



11호(2002.4)

- 손석춘의 "미국, 보수정당, 보수언론"
- 누가 핵 미치광이인가
- 미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인가
- 인터뷰 : 시민방송영화제 대상 <데이지 커터> 제작자
- 죽음의 댄스마약 엑스터시?
- 민간 의료보험 제도
-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 철도 파업 평가
- 사유화에 맞선 발전 파업
- 노무현의 모순된 행보
- 이스라엘의 테러
- 인도 '종교 분쟁'
- 이탈리아 노동자 투쟁
- 모든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라



10호(2002.3)

- 이라크
-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
- 민주당 대선 후보 폭로
- 피에르 부르디외 조사
- 과학과 이데올로기
- 세계화와 여성 노동자
- 포르투 알레그레
- 언론 스캔들
- 아르헨티나 노동자 저항
- 빅토르 위고



9호(2002.2)

- 아르헨티나
-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 인도-파키스탄 전쟁
- 월드컵과 정치
- 권영길의 2002년 선거 전망
- 주5일 근무제
- 정성진의 경제 전망



8호(2002.1)

- 끝없는 전쟁?
- 아프가니스탄 여성
- 보신탕 논란
- 인간 배아 복제
- 백색 공포?
- 스포츠
- 강준만 논쟁
- 브뤼셀 EU 정상회담



7호(2001.12)

-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
- 인/에드워드 사이드
-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
- 오늘의 제국주의와 전쟁
- 노무현 비판
- 수전 조지의 WTO 비판
- 마약 합법화
- 인력사 · 낙태 · 대리모



6호(2001.11)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 홍근수/이마드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의 반전 성명서
- 유엔
- 이슬람
- 유대 시오니즘의 본질



5호(2001.10)

-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전쟁
- 김수행 교수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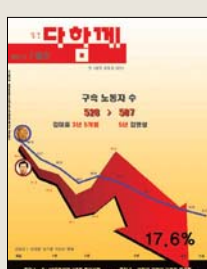
4호(2001.9)

- 제노바 G8회담 반대 시위
- 가톨릭 급진주의는 죽었는가?
- 소련 붕괴 10주년
- 메가워드의 불안한 앞날



3호(2001.8)

-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 민주노동당 상반기 파업 평가
-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판한다
- 매매춘 합법화



2호(2001.7)

- 서울대 개혁 논란
- 안락사 합법화 논쟁
- 6·15선언 1년을 돌아보며
- 새남금 간척 사업이 가져올 고통들
- 민족과 계급



1호(2001.6)

- 미친 스타 워즈 계획
- 부시의 환경 파괴
- 미스코리아 축전
- 경찰의 폭력
- 일본

